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 국감기간 중 국회 본관 250호실 /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대한은퇴자협회 / goodlaw@goodlaw.org

금년국감 최악이나, 국정 실태 드러내는 기능은 크게 유익!

---- 제20대 마지막 국회(2019년도) 국정감사 성적은 D학점 ----

사무총장 유인태, 헌법/법치원리/실정법 위반, 국감내내 모니터 폭력방해 고발/처벌추구!

- ▣ 올해 국감은 피감기관 788개로 역대 최대, 감사일 수는 겨우 159일(시찰 20회 포함) -- 부실국감은 필연.
- ▣ 국회 사무총장(장관급) 유인태는 헌법/행정법/공무원법을 위반하며, 국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2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링을 근거도 권한도 없이 조폭처럼 국감기간 내내 노골적 방해/훼손 -- 유인태의 즉각사퇴를 촉구.
- ▣ 질의만하고 자리를 떠서 텅빈 국감장, 다른 의원 질의는 듣지도 않거나 끼어들기와 막말, 욕설까지 구태 여전.
- ▣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 국감 - 증인(피우진 보훈처장)의 선서·증언거부의 초유사태/파행.
- ▣ 기승전 ‘조국(曹國)국감’ 으로 전락 -- 조국 장관 사퇴후도 조국(曹國)국감 계속.
- ▣ 낙하산 인사, 공기업비리, 혈세낭비 3종 세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정권에서도 여전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바른미래당 정책위 자료) / 이를 보고도 눈감는 여당, 부패한 정권을 바꾸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 국정감사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피감기관 / 이를 지켜보고 있는 주권자들인 국민은 참담/울화.

1.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21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모니터 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국회(20-4) 국정감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하여(10월 18일(금)까지) 국감을 간이평가합니다. <<정밀 종합평가는 국회운영위의 11월 1일 청와대 국감 종료후 정밀 평가과정을 거쳐 12월에 발표/시상할 예정임>>
2. 우리 국감모니터단은 2019년도, 문재인 출범정부의 3차년도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지 32년째인 국회(20-4) **국정감사성적을 ‘D’ 학점으로 평가**합니다.
 - (1)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국감, 경제활력국감, (검찰)개혁국감’ 을 내세웠으나,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야당을 누르면서 피감기관장이나 정책의 난맥상을 감싸기,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실정, 조국심판’ 등을 내세웠으나 증인채택부터 막혀 국감을 보이콧하거나, 피감기관장의 허위답변, 뻔뻔한 답변 등에 사실상 피감기관에 농락당하는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성이 상실된 국감을 전개했고, ‘국민의 미래를 챙기는 국감’ 을 내세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은 조국(曹國)일가 사건관련한 공방의 거대한 흐름속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2) 게다가 피감기관이 과다해서 최다였던 지난해 국정감사(753개) 보다도 더 많은 역대 최대의 78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했으면서도 국감조별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0일만 국감을 하면서도 밤샘 국감도 부족한 시간일텐데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고, 오후6시 이전에 종료되는 국감이 증가하는 등등

태부족한 시간을 막말과 욕설 등 감정싸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자료가 국정감사 부활 32년 동안 전무하여 과연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과 일반인 증인신문제도가 얼마나 필요한 지와 성과를 알 수 없음>

(3) 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 만 하고, 국회는 시정조치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올해도 도들이표 국감, 붕어빵 국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정조치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4)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함박도가 북한 땅이 아니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을 국방위원회 해병대(이승도 사령관)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2)과방위의 KBS 국정감사에서는 우리가 세금처럼 한전의 전기료에 포함시켜 거둬가는 KBS 시청료의 징수가 위법한 관행임이 밝혀 졌다. 3)과방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양열사업의 게이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4)산업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수십조여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해외지사의 호화건물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5)농림위와 환노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분석도 없이 마구잡이 보여 주기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6)교육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의 딸 사태로 특혜와 특권이 작용하는 입시제도의 병폐를** 알게 되어 분노하면서 그 입시제도개혁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7)전 상임위원회에 드러난 촛불정권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소위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이 당해 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8)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정부/여당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 공수처 같은 기구의 위험성 제기**는 여당의원(금태섭 민주당의원)으로써 당론에 불구하고 실질적 법치국가를 위한 의로운 외침으로 보였다.

9)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침체된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0)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색된 한미관계와 대북관계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17억원을 들이고도 남북 축구경기(월드컵 평양, 시종 살벌한)중계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색국면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3.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국회의원 특히 여당의원은 “**부실정부(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정권의 독(毒)이고,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당이 정부 감싸기 보다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적/시정케하여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여야를 넘어 문제되는 사항을 제대로 점검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정당의 의사(당론)에 기속되지 않고(국회법 제114조의 2) 잘못된 제도와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면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시정하게 한다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www.GoodLaw.org

2019년도 국감평점으로 F를 간신히 넘긴 D학점을 줄 수 밖에 없는 사유

- **국정통제 등 국회의 4대기능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가 조국(曹國)수호와 조국 파면 등 논란으로 기승전 ‘조국대전’으로 전략**

 - 국정감사제도는 1987년 현행헌법에 의해 민주화의 산물로 부활된 소중한 유산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국정감사를 조국대전으로 변질시키고 국정감사보다는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명백히 잘못
 - 대규모 장외집회로 국론분열이 가시화되었음에도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방관하고 조장 — 조국사퇴로 14일 국감은 서둘러 종료

- **북한의 국감 전 미사일 발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확산, 태풍피해 앞에서 조국 일가 수사에 몰입해 정작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문제로 반쪽국감, 파행, 피감기관 앞에서 여야 감정 대립으로 윤리위 제소 등 대처**

 - 국정감사는 안보불안, 민생불안, 경제불안, 일자리불안 등을 해소하도록 문재인정부의 정책난맥상이나 예산낭비, 부정부패를 드러내 정책을 바로 잡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인데,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국논란이 벌어지고 여야가 대처하면서 시간 낭비만 함.
 - 국정감사도중 자리뜨기가 심했고, 감사위원간 막말로 국정감사가 파행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빚어지고 이로 인해 윤리위 제소 등의 감정싸움만 하고 있는 점

-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공휴일과 국감준비기일을 빼면 사실상 12일정도만 국감, 더욱 피감기관의 자료 비협조로 자료요청과 대부분 상임위가 일찍 종료하는 한심한 국회**

 - 국정감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30일 이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규정이 도입된 2012년 3월 이후 한 번도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20대 국정감사의 성과를 총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해야 함에도 12일이내의 국감을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국감이 취소되기도 함
 -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안민석)는 증인채택문제로 국감계획서를 10월 1일에야 채택하였고, 반쪽 국감으로 시작해서 파행, 오후 6시 전 조기 종료 등 부실국감을 하고 있음
 - 국감장에서는 감사위원들이 질의시간이 부족하여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있음에도, 감사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낌.

- **감사도 안하면서 피감기관을 불러 놓고, 여당은 피감기관을 과도하게 감싸고 야당은 피감기관의 발뺌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함 보여**

 - 국감초반 국회는 감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피감기관을 불러다 놓고 인사치레 질문을 하거나, ‘한말씀하시지요. 기회를 드리겠다’ (문체위 안민석 위원장)
 - 증인채택 논란여전하고,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와 피감기관의 발뺌에도 야당은 손 놓고 속수무책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가짜뉴스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와해시키려, 또한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봉사, 친절공정의무를 위배 16개 상임위원장의 재가를 받은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을 국감장 입장을 막거나, 피감기관 뒤쪽에 명패도 없이 앉히거나, 20년 써온 모니터단 용어도 못쓰게 하며 모니터를 폭력방해함.**

D학점 국정감사 속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준 모니터추천 우수의원

위원회 (현원/정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 추천 우수의원
법제사법 (18)	금 태 섭 (민) / 김 도 읍 (한) 장 제 원 (한)
정무 (24)	유 동 수 (민) / 성 일 종 (한)
기획재정 (26)	심 기 준 (민) / 심 재 철 (한) 추 경 호 (한)
교육 (16)	박 용 진 (민) / 곽 상 도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1)	변 재 일 (민) / 박 성 중 (한) 윤 상 직 (한)
국방 (17)	민 흥 철 (민) / 이 종 명 (한)
행정안전 (22)	권 미 혁 (민) / 이 진 복 (한) / 조 원 진 (공)
문화체육관광 (16/17)	김 영 주 (민) / 김 재 원 (한) 박 인 속 (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19)	박 완 주 (민) / 이 만 희 (한) 이 양 수 (한)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28/29)	이 훈 (민) / 이 철 규 (한) 정 유 섭 (한)
보건복지 (22)	진 선 미 (민) / 김 승 희 (한)
환경노동 (16)	한 정 애 (민) / 임 이 자 (한)
국토교통 (30)	박 흥 근 (민) / 송 언 석 (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9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간이평가 대국민 보고서

《 목 차 》

I. 20대국회 4차년도(2019년도) 국정감사 간이 총평	7
1. 2019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간신히 D학점	7
2. 2019년도 전반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9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13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반쪽국감 파행,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14
5. 정당국가화 경향 지나쳐, 의원도 ‘조국’ 언론도 ‘조국’	15
6. 민간인 특히 기업인 국감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과제 :	16
7. 국회사무처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대한 위법, 갑질행태에 유인태 사무총장의 사퇴 촉구 - 국회사무처는 즉각 사과·시정하라	17
II. 2019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17
1. 수박겉핥기 2019년 국정감사	17
(1)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17
(2) ‘한마디’ 말 못하는 들러리 기관	18
(3) 마음은 장외집회, 다음 총선 공천, 열의를 가진 국감진행 안돼	21
(4) 저녁 6시 이전에 일찍 마무리되는 국감은 늘어남	22
(5)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	24
(6) 파행성 정회는 줄어 듦 - 싸우면서 그냥 진행	24
2. 4년차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도 나타남	25
(1) 내년 총선의식을 한 4년차 국회의원의 지역관련 질의 증가	25
(2)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25
(3) 국정감사 준비보다는 지역구 행사 챙기기	26
(4)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26
(5) 역대급 자리 안지키기	26
3.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캄캄	26
《이하 자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참조》	
III. 화제(話題)로 본 2019년도 국정감사*	28
1. 이번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 소품 일부 사례	28
2. 언론에 뜬 국정감사장의 증인, 참고인	33
3. 곤욕을 치른 피감기관의 장	37

4. 화제를 모은 국정감사장 — 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41
(1)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내지도 않은 공고를 본”	41
(2) 과방위의 KIST 국정감사장 “조민 그 조민 아니죠”	41
(3)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2차 국감장 “대통령 기억력 걱정”	42
(4)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진짜 병신 같은게”	42
(5) 행안위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탄핵되어야 할 의원들”	42
(6) 행안위의 대구시청 국정감사 “수구도시”	43
(7)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 “무기력감, 박탈감”	43
5. 국정감사장 앞 시위	43
6.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피감기관장	45
IV. 상임위별 국정감사 활동 편린	48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48
2.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51
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54
4.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56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59
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	63
7.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	65
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해숙)	67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	71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73
11.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	76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80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82
14.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86
V. 촛불정권에서도 낙하산, 비리, 혈세낭비 여전	89
1. 낙하산 인사	89
2. 부정, 비리 의혹	90
3. 혈세 낭비 내지 방만경영 의혹	100
VI. 매일매일 깜짝 놀란 통계 및 자료 편린	116
《참고 : 자료 20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138

I. 20대국회 4차년도(2019년도) 국정감사 간이 총평

1. 2019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간신히 D학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해 ‘C’ 보다 낮은 금년 국정감사(20-4)의 성적을 ‘D’ 학점으로 잠정 평가한다.

(1)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 권능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영토를 보위하며 국민민생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 수 있다.

(2)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그에 따라 불거져 나온 의혹의 규명을 위해 수사와 함께 기승전 ‘조국(曹國)’ 국정감사를 전개했다. 한 번에 열거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거의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고, 보도되는 내용으로 충격을 주었다.

(3) 조국수호 쪽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초대형 장외 집회(서초동집회)가 열렸고, 조국 파면 쪽에선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실정을 규탄하는 초대형 장외집회(광화문집회)를 개최하였고, 조국 전 장관의 사퇴이후에도 계속되었다.

(4)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함박도 문제’에 관하여 이미 2017년 5월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해병대 사령부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독일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저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척박한 1평방미터의 땅을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도 침묵한다면, 결국 그 민족은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고 말하고 있다. 함박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함박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중국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평화를 줄 수도 없고, 영토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과방위의 KBS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처럼 한전의 전기료에 포함시켜 거둬가는 KBS 시청료의 징수가 위법한 관행임이 밝혀졌다.

과방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탈원전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양

열사업에 대한 비리와 게이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산업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수십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해외의 호화건물에 예산낭비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림위와 환노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분석도 없이 마구잡이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육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 딸 사태로 특혜와 특권이 작용하는 입시제도의 병폐를 알게 되어 분노하면서, 입시제도개혁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 상임위원회에 드러난 촛불정권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소위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 졌고, 이러한 것이 당해 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조정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정부/여당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 공수처 같은 기구의 위험성 제기는 여당의원(금태섭 민주당 의원, 법무부 국감, 대검찰청 국감 등에서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는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공수처를 가진 나라가 있는지?)으로써 당론에 불구하고 실질적 법치국가를 위한 외로운 외침으로 보였다.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의 침체된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색된 한미관계와 대북관계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남북 축구경기 중계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색국면임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5) 이번 국정감사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8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박의 겉핥기식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상임위원회가 ‘조국’ 이슈에 매몰된 측면이 있었고, 많은 국정감사가 예년과 달리 오후 6시 이전에 끝나는 등 국정감사에 대한 열의가 사라졌다. 더욱 피감기관 앞에서의 감사위원간의 욕설과 막말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케 하였다.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국감자료 제출을 잘 하라’ 고 하였지만, 전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지연, 거부 지연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법사위의 채이배 의원은 “국감 자료제출 거부로 국정감사 못 해 먹겠다.”(보도자료,10.16) 는 자조 섞인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열악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잘못 알아듣고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단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모니터위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국정감사장에서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이 이었다.

여야의 싸움에 더하여 피감기관도 예년과 달리 팔장을 끼고 답변을 하다가 지적을 당하거나, ‘모르쇠’ 로 일관하거나 미술관 입장객수 조작 등 명백한 잘못에도 ‘검토해 보겠다’ 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이번만 모면해 보자는 행태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또한 법정공휴일이 있음에도 국감 중간에 쉬는 날짜가 많아졌고, 시찰 또한 여전하였으며 수감기관은 지난해의 753개였는데 오히려 늘어난 788개로 동시수감기관이 많아져 실제 국감을 하는 날짜는 줄어들고 수감기관은 늘어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못하였다.

2. 2019년도 전반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교육위, 법사위,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 크게 다뤄졌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조국’ 이란 말이 65회나 나왔고, 4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72회 나왔으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 은 10회 나온 반면 ‘조국’ 은 11회 나왔으며, 조국 전장관의 사퇴후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이 148회 나오는 등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 감사를 비롯해 거의 전 상임위원회에서 기승전 ‘조국’ 에 모자라서 관련 ‘조국’ 증인 채택문제로 국감이 파행되거나 정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019년도 국정감사 위원회별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이슈 한눈에 보기》

위원회 (위원장)	조국 관련 이슈
법제사법 (위원장 여상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문제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회주의자' 지칭 문제 ○ 조국장관 일가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 ○ 조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 공소장 공개 ○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결정 ○ 조국 장관의 딸 '미성년자 논문 등재', '서울대 장학금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 등에 대해 감사 ○ 조국 장관 사퇴에 따른 대통령 책임 여부 및 검찰개혁 ○ 조국 일가 수사의 신속한 진행
정무 (위원장 민병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조국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 ○ 조국 장관의 증조부 논란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적절성과 위법 의혹 ○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주도로 해당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위법 논란, 그리고 코링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WFM과 익성, IFM, 웰스씨엔티와의 관련성
기획재정 (위원장 이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애피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 ○ 조장관 부인 정경심씨 상속세 납부 여부 (국세청) / 정씨의 상속세 탈세 의혹
교육 (위원장 이찬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휴학계 논란 ○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직 연장 논란 ○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표창장 관련 논란 ○ 한국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관악회 장학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정상적인 과정인지 여부 ○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조사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노웅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장관 딸 논문을 둘러싼 연구 윤리 문제 ○ 조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과 함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 KIST .기념비 조국 딸 이름 ○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애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문제
행정안전 (위원장 전해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 등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 ○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안민석)	○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불발 야당의 국감 보이콧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됨)
농림수산물해양수산물 (위원장 황주홍)	○ 조 장관 처남 근무회사 관련 의혹(SM그룹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이종구)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웰스씨엔티 최고 대표와 익성 이모 대표의 불출석(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 최고 대표와 코링크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 대표)
보건복지 (위원장 김세연)	○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의 관계 ○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 문제
환경노동 (위원장 김학용)	○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특혜 의혹(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진 대학원생의 참고인 증언)

국감 직전에 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자주국방태세 정비 및 안보불안감 해소와 관련하여 질타가 **국방위(위원장 안규백)**에서 이어졌고,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대통령의 방미성과, 외교라인 불화와 대일관계 등에 대해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에서 다뤄졌다. 특히 국감직전 산업위로 사보임한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미국측의 아그레망이 이루어져 10월 10일 이수혁 국회의원이 사퇴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는 기승전 ‘조국’ 이라고 할 정도로 국감 초반 조국 국감(여당의 검찰개혁 포함)에 매몰되었으며, 위원장과 여당의원간의 욕설 논란으로 국감도중 윤리위에 제소되는 등의 사태가 빚어졌고, 난데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접대 의혹 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10. 14.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판사의 증인채택 논란으로 파행하기도 하였고, 패스트 트랙수사와 관련해서도 충돌하였다.

농림수산물해양수산물위원회(위원장 황주홍)에서는 첫날 국정감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으로 농림식품부에 대한 국감이 취소되었으며, ASF 원인과 확산대책의 미흡이 질타되었고, 해양수산물산업의 발전과 소관 기관의 낙하산 인사, 특혜지원의혹, 모럴 해저드 등이 조명되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에서는 ‘조국 딸과 나경원 아들’ 국감이라고 할 정도 입시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되었으며, 지난해와 같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파헤쳐 이슈화시키는 등의 성과는 없었다. «11년 연속 파행했는데 올해는 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에서는 탈원전 대책, 미래 먹거리대책, 원자력 안전, 가짜뉴스 근절책, 연구기관의 모럴해저드, 부실학회 정리 등이 조명되었으나, 조국 딸 입시부정관련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여야간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한 갈등의 골이 풀리지 않은 채 훈민정음 해례본 환수, 문화재 보호, 문화체육정책, 관광정책에 대해 조명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해숙)는 지난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조명하였고, 검찰개혁, 선거제도 관련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결과지로 의원 간의 막말 소동이 경찰청 국감, 인사처국감, 대구시청 국감 등에서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첫날부터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일부 피감기관의 장을 조기 귀가시키기도 하였으나, 결국 10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사장의 귀가로 인해 잠시 파행이 빚어졌으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산하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문케어, 인보사 시대 등의 정책국감을 하였으나,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치매 걱정 발언으로 인해 더불어 민주당이 집단퇴장을 하여 파행하였고, 윤리위 제소사태까지 빚어졌다.

지난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증세문제를 비롯하여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와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으며,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에서는 손혜원 의원 부친 논란을 비롯해 국가 유공자 공훈정책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중소기업인 살리기 정책(특히 주 52시간제 내년 시행 등에 박영

선 장관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대해 조명을 하였으나, 언론에 조명된 것은 이종구 위원장의 출석참고인에 대한 혼잣말 ‘욕설’ 이었다.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국회는 무려 788개(지난해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역대 가장 많은 피감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작년(753개)보다 35개가 증가하였고, 현장시찰도 20회(정보위 제외)나 실시한다. (행안위 1반이 계획에 없던 현장시찰 실시로 비난을 받음)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보다는 호통과 욕박지르기, 자리뜨기, 상대방 의원에 대한 질의도중 끼어들기 등의 구태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간의 막말로 인해 윤리위 제소까지 되었다.(10월 8일 민주당 의원 20명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윤리위 징계안 제출)

지난해와 같이 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이번만 지나면 된다’ 는 식의 뻔뻔스런 답변에도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자, 모니터위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듯하다’ 는 평가를 하였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1년에 한 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인격모독이 아닌 ‘질타’ , ‘호통’ 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며 안이하게 답변하였고, 국회의원들도 질의만 하고 후속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위원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양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입성하여 반드시 자신의 질의한 문제를 확인하겠다는 비분강개한 질타도 하였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

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반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사항에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 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정조치 내지 예산낭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반쪽국감 파행,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은 올해 증인채택문제로 국감 첫날(10. 2)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반쪽 국감을 하였고, 7일에는 증인 채택 논란으로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반쪽과 파행성 정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대부분 6시 이전에 국정감사를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금요일에는 나란히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갔다.

정무위원회에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신경전이 있었으나,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이 투

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의 최 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 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참하였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정무위와 같이 국감 첫 날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다. 의사진행발언만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지난해(2018)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증인신청 논란으로 파행을 빚기도 하였는데, 올해에는 피감기관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며 야당의원들이 업무보고시에 의자를 돌려 앉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감 증인이 출석은 하였으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조국 딸 인턴관련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우진 전 보훈처 장관은 선서와 증언 모두를 거부하였다.

5. 정당국가화 경향 지나쳐, 의원도 '조국' 언론도 '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정책공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안보, 경제, 위생 등 주요 쟁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파행으로 치닫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 장관 임명' 과 관련된 여야간의 갈등은 국회 내에서 대화와 갈등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야당(자유한국당)은 수요일 광화문 집회를,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토요일 서초동 집회를 바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 이라고 하여 한쪽에서는 조국비리 부각과 파면 촉구를 반대편에서는 조국 수호 및 검찰권 남용방지를 위한 검찰개혁을 주장하였다.

거대 여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균형추를 행사했던 제3당인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은 내부문제와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은 분열되어 의원의 대부분이 무소속화되었다.

《국감시작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각오》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 당은 민생 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 중에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날날이 파헤쳐달라. 조 장관을 저희가 꼭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보도)

원래 이번 국정감사 자체가 조국 이슈 외에 언론에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당(대표 심상정), 우리 공화당(대표 조원진, 홍문종), 민중당(대표 김종훈)의 국정감사는 부각되지 않았고, 다만, 우리 공화당 의원의 국정감사내용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태극기 집회에 전달되었다.

언론 역시 ‘조국대전’ ‘조국 블랙홀’ ‘기승전 조국’ 이라면서 조국 장관 의혹 관련 의원의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으며,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이후에는 ‘조국 여진’ 이라며 조국 이슈에 대해 보도하였다.

6. 민간인 특히 기업인 국감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과제 :

32년간 국정감사를 하였지만 민간인 증인에 대한 효과분석조차 없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다가 취소하는 등 그룹총수들을 소환해 호통을 치는 국정감사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기업인이나 민간인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인 증인신청은 국민의 대표가 직접 국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인을 불러 호통, 야단을 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감과 관련하여 민간인, 특히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감이 정부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본질을 벗어나 ‘기업감사 또는 길들이기의 장’ 이 되거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이용하여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인들을 불러 야단칠 게 아니라 국감의 취지와 법에 맞게 그 기업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게 옳다고 본다.

또한, 민간증인을 불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나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에서 그런 연구나 효과 분석 자체가 없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7. 국회사무처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대한 위법, 갑질행태에 유인태 사무총장의 사퇴 촉구 - 국회사무처는 즉각 사과·시정하라

(자세한 20일 동안의 국회사무처의 횡포는 별도 문건으로 작성됨)

II. 2019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1. 수박겉핥기 2019년 국정감사

(1)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 하루에 감사하는 피감기관수는 평균 6.1개 기관(외교통일과 정보위 제외)이었다.

하루평균 피감기관 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하루 평균 10.7개 기관을 감사하였고, 다음으로 국방위원회는 7. 1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8. 2개 기관, 법제사법위원회는 6.2개 기관이었다.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수감이 이루어진 일수는 무려 30회나 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10개 이상 피감기관을 감사한 경우가 각각 4일이나 되었다.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는 22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421분 동안 진행되어 기관당 평균 19분 정도 밖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 10월 10일 사감위 국감 등에서 9개 기관에 대해 317분 정도 감사를

하였으며 기관당 평균 35분정도 감사한 꼴이 된다.

《2019년도 10개 이상 동시 수감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전체 감사일수 (시찰포함)	시찰제외 국감일수 (시찰동시 국감일포함)	전체 감사대상기관	1일 평균 감사대상기관 수	10개이상기관 동시수감일수
국회운영	2	2	9	4.5	0
법제사법	11	11	76	6.9	4
정 무	11	10	45	4.5	0
기획재정	10	10	29	2.9	1
교육	8	7	91	13	4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12	10	82	8.2	3
국방	11	9	64	7.1	3
행정안전	11	11	32	2.9	1
문화체육관광	10	7	75	10.7	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0	10	34	3.4	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1	10	61	6.1	3
보건복지	10	9	45	5	3
환경노동	12	10	71	7.1	4
국토교통	10	10	32	3.2	0
여성가족	2	1	6	6	0
계	141	127	752	6.10	30

*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수치임

(2) ‘한마디’ 말 못하는 들러리 기관

이번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5개 이상 피감기관이 있는 곳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장관의 질의 답변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참석한 피감기관장 중에서 감사위원의 질의를 못받은 경우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피감기관수 현황》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법제사법	10. 2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9
국 방	10. 2	국방부 등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통용합데이터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립서훈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차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 2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 등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
교육	10. 4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 7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보건복지	10. 7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6
환경노동	10. 7	기상청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APEC 기후센터	11
국 방	10. 8	합동참모본부	합동군사대학교	1
정 무	10. 10	국민권익위원회	88관광개발(주)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 10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뇌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환경노동	10. 10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 1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7
환경노동	10. 14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3
법제사법	10. 15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 15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1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0. 16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
보건복지	10. 17	한국노인인력개발 원	아동권리보장원	1
문화체육 관광	10. 17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1
행정안전	10. 17	공무원연금공단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2018년도 국회 내 병합(동시)감사 중 질의 받지 못한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질의를 받지 못한 대상기관	
10월 13일 (금)	외 교 통 일 위 원 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0월 16일 (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 위 원 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립무형유산원 (대행체제임)	
10월 17일 (화)	보 건 복 지 위 원 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지원센터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국립기상과학관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APEC기후센터	수도권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 기 업 위 원 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10월 18일 (수)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10월 19일 (목)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동극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아시아문화원 국립현대무용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진흥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정보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 위 원 회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3) 마음은 장외집회, 다음 총선 공천, 열의를 가진 국감진행 안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밤 11시를 넘어서까지 열의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첫날은 4개 위원회가 11시 넘어서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4일에는 2개위원회 7일에는 1개, 10일 1개, 14일 1개 17일 1개로 모두 10번 밖에 없었다. 피감기관은 늘고 감시시간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되었다. 특히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앞둔 8일부터는 거의 심야 국감은 사라졌고,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이후에는 겨우 2번 밖에 없었다.

《밤 11시 넘은 2019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시작	끝
10. 2 (수)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경제·재정 정책)	정부세종청사 10:00	10:02	23:30
	교 육	교육부	국회	10:07	23:25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10:07	23:19
	산 업 통 상 자 원 중 소 벤 처 기 업	산업통상자원부 I (산업·통상) 특허청 등	국회	10:07	23:19
10. 4 (금)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05	23:48
	국 토 교 통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회	10:02	23:34
10. 7 (월)	산 업 통 상 자 원 중 소 벤 처 기 업	산업통상자원부 II (에너지)	국회	10:10	23:16
10. 10 (목)	국 토 교 통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회	10:17	23:39
10. 14 (월)	국 토 교 통	한국감정원등	국회	10:05	23:03
10. 17 (월)	국 토 교 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서울)	10:03	23:39

(4) 저녁 6시 이전에 일찍 마무리되는 국감은 늘어남

18일 금요일까지 6시 이전 국감 종료 횟수는 총 28회였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국정감사는 6시 이전에 끝나고 6시 이후라도 8시 이전에 일찍 국정감사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지방 분반 국정감사는 6시 이전에 종료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첫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부터 5일간이나 6시 이전에 끝나고, 하루는 간신히 6시를 조금 넘겨서 끝났다.

농림수산물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조기 종료하는 위원회 중에 한 곳이었었는데 오후 6시 이전에 끝난 경우가 2번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번,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반이후 2번이 있었다.

《2019년도 오후 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끝난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시작	끝
10. 2 (수)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회	10:07	17:21
10. 4 (금)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회	10:04	17:19
10. 7 (월)	국 방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경기 과천)	10:11	17:58
10. 8 (화)	국 토 교 통	<지방1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	10:05	16:08
		<지방2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청 (대전)	10:00	13:37
10. 10 (목)	행 정 안 전	<지방1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대구)	10:03	14:46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현장시찰	
		<지방2반>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 (무안)	10:00	12:01
		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도청 (무안)	14:01	16:15
	문화체육관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국회	10:04	17:45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시작	끝
		회 등			
10. 11 (금)	행 정 안 전	<지방1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부산)	10:01	15:09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15:32	17:14
		<지방2반> 전라북도	전북도청 (전주)	13:9	15:43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	10:01	12:40
10. 11 (금)	농림축산식품 해 양 수 산	해양경찰청 등	국회	10:04	17:45
10. 14 (월)	문화체육관광	대한체육회 등	국회	10:15	17:44
10. 14 (월)	보 건 복 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공단 (원주)	10:05	17:54
10. 15 (화)	교 육	<감사1반> 전남대학교, 병원 등	전남대학교 (광주)	10:04	13:02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전남대학교 (광주)	14:10	17:06
	교 육	<감사2반> 경상대 등	경상대학교 (진주)	10:01	12:49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진주)	14:30	17:31
10. 15 (화)	국 방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발안)	10:09	13:06
10. 15 (화)	행 정 안 전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홍성)	10:05	15:12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예산)	15:39	17:01
	행 정 안 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인천)	10:05	12:4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 시청감사 종료후	14:01	16:00	
10. 15 (화)	농림축산식품 해 양 수 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	10:02	16:25
10. 15 (목)	보 건 복 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회	10:00	17:55
10. 15 (목)	국 토 교 통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군산)	10:07	13:15
10. 17 (목)	기 획 재 정	<지방1반>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주)	10:02	12:23
10. 17	기 획 재 정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10:02	12:13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시작	끝
(목)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부산지방국세청 등	부산본부세관 (부산)	15:29	17:51
10. 17 (목)	국 방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2작전사령부 (대구)	10:02	12:20
10. 17 (목)	행 정 안 전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회	10:05	17:47
10. 17 (목)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회	10:03	17:20
10. 17 (목)	보 건 복 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회	10:01	17:41
10. 18 (금)	법 제 사 법	군사법원	국방부	10:05	17:13
10. 18 (금)	국 토 교 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10:05	15:00

(5)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반 반장 박정 의원의 블로그를 보면, 8시간 비행기 타고가 피곤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나온다.

미주반 첫 피감기관은 주UN대표부로 국회공보에 의하면 15:02에 시작하여 18시 57분에 끝나 3시 55분에 국정감사를 하였다. 이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불참하였다.

마찬가지로 구주반은 첫 국정감사를 주 벨기에 대사관 겸 주 EU 대표부였는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2시 1분 정도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파행성 정회는 줄어 듦 — 싸우면서 그냥 진행

파행성 정회의 경우에는 첫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증인신문 도중에 일시 정회를 한 것으로 시작으로 총 6회 파행성 정회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회로 가장 많았는데 스포셜올림픽코리아(SOK)증인 채택 논란으로 잠시 파행을 거듭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위원의 대통령 치매 우려

발언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장전담부장판사 증인출석문제로, 국토교통위는 도로공사 사장의 답변태도로 일시 정회를 하였고, 정무위원회는 18일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관계로 일시 정회를 하였다.

2. 4년차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도 나타남

(1) 내년 총선의식을 한 4년차 국회의원의 지역관련 질의 증가

○ 이개호 의원(과방위) 기초과학연구원 지역편중 과도, 광주지역은 전체 대비 연구비 4.8% 불과(10.11. 보도자료)

○ 송갑석 의원(산업위), 광주전남 산업R&D예산 최하위, 전국 대비 1.6%

○ 조배숙 의원(산업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수출지원사업에 전라북도 기업은 최근 3년간 코트라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은 1628개였는데, 이 가운데 전북지역 기업은 중복을 포함해 전체의 2%인 33개에 불과했다.

○ 강원도 산불(산업위) 이철규 의원 : 강원도 산불 중소기업영업자들 대책

○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 : 김관영 의원

○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전통적으로 기계·소재·부품산업이 발전해 있고 지정학적으로 일본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집중적인 외자 유치로 기계·소재·부품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의 코트라 국정감사)

○ 국립중앙의료원 청주 오송으로 이전하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 10월 2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심각하고 대책은 감사원 등이 지적한 것으로 내세운다.

(3) 국정감사 준비보다는 지역구 행사 챙기기

국토교통위 소속 한 의원 블로그에 보면, 국정감사 소식은 국정감사 현장시찰 1건인데, 국정감사 중인데도 지역구 행사 참석 및 광화문 소식은 크게 홍보하고 있다.

(4)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국감 시작을 하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4년차에는 자료 안주기, 버티기가 더 심해지는 듯하다.

(5) 역대급 자리 안지키기

MBC에서 텅빈 국정감사장(산업위 국정감사장)을 보도할 정도로 자신의 질의 시에만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4년차 국정감사의 폐해가 드러난 것으로 모니터링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실망하였다고 하고 있다.

10월 17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중에 18시 53분경 박병석 의원의 질의시에 여당의원은 박의원 외에 1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3.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캄캄

국회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 현황에 국회의원의 프로필 연락처 보좌진 이메일 주소 등을 소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란이 공란이거나 소개 되어 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사실상 홈페이지(SNS 포함)를 볼 수 없는 경우가 감사위원 대비 21%나 되었다. 10명에 2명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되어가는 4년차에도 홈페이지를 소개하지 않고 있었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장 중에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홈페이지 소개가 없었다.

가장 홈페이지 소개율이 저조한 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로 소소위원 28명 중 16명 밖에 소개 되어 있지 않아 소개율이 57.14%였다.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10월 10일 목 일과시간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제사법	18	12	66.67%
정무	24	21	87.50%
기획재정	26	23	88.46%
교육	16	13	81.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5	75.00%
외교통일	22	19	86.36%
국방	17	15	88.24%
행정안전	22	18	81.82%
문화체육관광	16	13	81.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3	68.4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8	16	57.14%
보건복지	22	20	90.91%
환경노동	16	13	81.25%
국토교통	30	22	73.33%
계	296	233	78.72%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지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40%미만이 공개하고 있었다. 단순 기사나 사진을 제외하고 피감기관 별로 보도자료나 질의 영상 또는 질의 요약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지를 조사해본 결과이다.(국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경우만 조사한 것임)

《 2019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9	50.00%
정무	24	5	20.83%
기획재정	26	9	34.62%
교육	16	9	56.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7	35.00%
외교통일	22	7	31.82%
국방	17	10	58.82%

행정안전	22	11	50.00%
문화체육관광	16	4	25.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5	26.3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8	8	28.57%
보건복지	22	12	54.55%
환경노동	16	6	37.50%
국토교통	30	14	46.67%
계	296	116	39.19%

Ⅲ. 화제(話題)로 본 2019년도 국정감사*

1. 이번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 소품 일부 사례

(1) 김진태 의원의 국대 떡볶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였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 떡볶이”라면서 차액가맹금(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 공개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2) 송희경 의원의 와이파이 배낭식 이동기지국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 커다란 와이파이 문양이 그려진 배낭식 이동기지국을 멘 남성을 등장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이하 같음)

시켰다. 송 의원은 “(배낭식 이동기지국이 있으면) 산불이 났거나 재난 현장에 가면 주변에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된다”며 “그런데 다 개발이 됐는데 규제 문제로 해외로만 수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임시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가 일부 기능만 한정해서 허가를 해줬다”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정부가 우리 세금을 써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송희경 의원의 라돈 속옷

송희경 의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제품 가운데 여성 속옷도 있는데 여전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속옷을 직접 들고 나왔다. 송 의원은 “제품을 뜯어보더라도 소비자들은 안전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교환을 받으려 해도 연락이 두절됐다”며 “방문 측정 서비스는 완료가 됐고 자가 측정해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설명대로 해보니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4) 송희경 의원의 드론 재머

송희경 의원이 무선통신을 방해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재머’를 꺼냈다. 송 의원은 이 장비를 사용하여 드론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보였다. 송 의원은 “원전 주변에 불법 드론이 나타난 것이 지난달에만 4건이 있었다”며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²⁾.

(5) 박경미 의원의 왕따 체험앱

2) 이외에도 송희경 의원의 질의시에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도 소품으로 등장했다.

박경미 의원은 10월 2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왕따 체험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진 ‘사이버폭력 백신’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며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앱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자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고 가상의 가해자들이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고작 40초에 불과한 체험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고통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한다”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다수 학생이 관련돼 있지만 학교급과 지역을 넘나드는 사안이 많아서 조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6) 송희경 의원의 김박사 넷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박사넷’이 등장했다. 김박사넷은 스타트업 ‘팔루썸니’가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연구실 정보 공유 사이트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박사넷 화면을 보여주며 “우리 학생들은 대학원을 가려는데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면서 “과학기술원 4곳이라도 연구실 정보를 오픈할 생각이 없나”라고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신 총장은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에 이 문제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7) 김한정 의원의 내란선동 고발장 봉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4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 도중 전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내란선동 등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했다. 국정감사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RO’가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형법상 국헌문란,

내란죄, 내란선동죄를 기초로 불순한 사회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8) 김영호 의원의 폭발 자동소화장치

2019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시한폭탄 소화기’로 칭하며 소방청의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폭발 자동소화장치를 직접 들고나온 김 의원은 “며칠 전 영등포에서 터진 것을 수거해 왔다”며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증인으로 부른 제조업체 대표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간의 안 보이는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다”며 “문제는 소방청이 (폭발 소화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확보도 못 하고 의원실에 요청해 가져다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9) 이용주 의원의 ‘성인용 리얼돌’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리얼돌을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을 자신의 옆에 두고선 리얼돌의 수입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10) 유기준 의원의 ‘통일부 사전제작’ 대북지원용 쌀 포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겹면에 표기된 쌀 포대를 보여주며 김연철 통일부 장

관에게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사전 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1) 과방위 자유한국당의 ‘근조 KBS’ 피켓

10월 17일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은 ‘근조 KBS’,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감사를 하였다. KBS 보도의 편향성 문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의 KBS 인터뷰 내용 검찰 유출’ 의혹 제기 등을 문제 삼았다.

(12) 박성중 의원의 AR(증강현실) 고글

10월 15일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AR(증강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질의를 하였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보인다” 고 하였다.

(13) 정세균 의원의 ‘증도가자’(證道歌字)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가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통해 공개되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보물로 지정된 책 ‘증도가’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번각본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2. 언론에 뜬 국정감사장의 증인, 참고인

(1) 양 모씨('멕시코서 누명 옥살이' 참고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지난 2일 외교부 국감에는 누명을 쓰고 멕시코에서 1154일 동안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 씨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지난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에서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체포돼 3년 2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다. 양씨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 임 모씨 대학생원생(청년 일자리 대책)

환경노동위원회의 11월 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고려대 대학원생 임모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임씨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임씨는 조국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 의원의 질의에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졌다”고 토로했고,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3) 임은정 부장검사(검찰개혁 관련)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는 것을 국민이 모두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난장판인 상황”이라며 “국민이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 하고 방어하는데 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국민 분

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며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하는데, 상급자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노력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로서 아프지만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한다“며 “다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취소했다.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월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돌연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무기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롯데그룹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은 신동빈 회장에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로 교체됐다.

(5) 명재권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국 동생의 영장심사를 기각한 명재권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가 이번 국감의 화제가 되었다. 야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이 전날 있었던 민주당의 법원개혁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법원의 오점이라고 질타했다. 14일 서울고법 국정감사 때 출석요구관련 파행을 초래했다.

(6) 윤운상 넥스지오대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 윤운상 넥스지오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던 회

사이다.

증인신문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3차 물주입 후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조치 취했나?” 라 하자 윤 증인은 “특별한 조치나 지시가 없었다” 고 말했다. 정부의 지열발전 관리감독 책임이 부실했음을 증명해준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관기관인 넥스지오라도 사업 중단과 조사 의뢰를 제안했어야 했다” 며 정부와 주관기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윤 증인은 “포항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고 답했다.

(7)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기재위의 10. 2.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참고인 발언에 민주당이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모욕죄’ 라는 엄포까지 나왔다.

한국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며 “경제부총리가 국제기구가 재정확장을 쓰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소주성·포용성장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자 “경제학 전공인줄 알았더니 아니다” 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 고 쏘아붙였다. 또 이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며 ‘국회의원 갑질’ 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언사” 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8)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선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특혜’ 의혹 등 논란에 연루된 인물이자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

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 관련 질의에는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장관 후보 거론에 대해선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9)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관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선서 전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대에 섰다. 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10)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10월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기존 간호인력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이 교수는 아주대병원 지원금 돌려막기 이외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사업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문제도 공개했다.

(11) 명 샤오원 화웨이지사장

명 샤오원 한국화웨이지사장이 10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섰다. 명 샤오원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국내에 구축한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에 결코 백도어 같은 위협을 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

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원한다면 '노백도어' 협약도 맺을 의향이 있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외신 블룸버그가 화웨이 장비에서 '백도어'를 발견했다고 지적하자 명샤오원 지사장은 “백도어는 자살행위이며 화웨이는 그간 전세계 주요 국가와 통신사에 납품한 장비에 결단코 백도어를 심은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백도어란 장비에 비밀프로그램이나 초소형 칩셋 등 부품을 숨겨 해당 장비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통로를 말한다.

3. 곤욕을 치른 피감기관의 장

(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국당 의원들의 손팻말 때문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가짜위원장 한상혁 즉시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자신의 노트북에 부착했다. 즉,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우리 당 의원들은 한상혁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 대한 반성 등이 취임 후 행보에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당연히 (한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국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볼 낯이 없을 것”이라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의 지적 이후 한 위원장의 증인선서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위원장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를 국감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퍼포먼스'였다.

(2)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자유한국당 강석호·김태흠·이만희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여권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흠 의원은 공사의 황호선 사장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황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중·고교를 같이 나온 학연이 있고,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특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동생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등이 채용된 SM 그룹에 공사가 중소기업지원액의 21%에 달하는 1천360억원을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3)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10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 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태풍 미탁이 상륙하면서 이강래 사장은 상황 대비를 위해 국감장을 떠났다.

이석을 해도 좋은 것은 태풍 피해 대책을 위한 것이었는데,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봤다고 답변을 하였다.

(4)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 대변인”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10월 2일 국방위 국정감사는 함박도가 북한 영토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북한 대변인’이라는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샷대질까지 오가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국방위 공방은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정 장관에게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고 북한이랑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하자 “뒤에 설명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을 끊거나 “들어보세요”라고 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일찌감치 함박도는 NLL(서해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같은 압박은 사실상 한국당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부각하려는 성격이 짙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동료 의원이지만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은 삼가 달라”며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고 항의했다. 홍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동료 의원 간 토론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5) 조국 법무부장관

2019년 최대의 화제 피감기관장으로 국정감사 하루 전 사퇴를 하여 결국 **조국 없는 조국국감**이 되었다.

(6) 박원순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10월 17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우리 시장님은 민생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신경 쓰고 있다. 금년에만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약 150억원을 투입했다”며 “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8억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가 북한에 평양시 발전계획”이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지금 북한은 금년 들어와서만 11차례 미사일 도발하고 방사포를 쏘고 있었다. 미사일 연습하는 게 서울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에서는 평양시 발전계획을 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서 아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유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지는 아나”라며 “옥탑방 체험이 소중했다고 강조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사는지 체험해 볼 생각은 없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통일되면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의 ‘천만시민을 모독하는 질의’라고 맞받아쳤지만, 서울시민보다 평양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7) 이낙연 국무총리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사퇴의 파편을 맞았다.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의 사퇴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무조정실장은 “사퇴 시점이 언제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적어도 12월까지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 총리가) 연말까지는 사퇴 안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12월 이후에는 사퇴하지 않겠느냐로 워힌다”며 재차 묻자, 실장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8) ‘꿀떡은 언어장애인’ 된 국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10월 18일 국책연구원장들을 향해 “꿀 떡은 병어리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렇게 비판이 쏟아져도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 한마디 없다”며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노력하라. 직을 걸고 하라. 잘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며 주문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불러세워선 “일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니 폐기하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디펜스(방어)를 하라”고 밝혔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향해선 국토연구원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학자로서 자신하느냐”며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책연구원은 30년을 가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정부를 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화제를 모은 국정감사장 — 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1)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내지도 않은 공고를 본”

국회 교육위원회의 10월 10일 서울대학교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당시 정식 인턴 공고가 없었다는 점과 센터장과 조 장관의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민 씨가)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의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나경원 의원 아들의 논문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 과방위의 KIST 국정감사장 “조민 그 조민 아니죠”

KIST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KIST 인턴 기록이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 딸은 당시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이다. 이날 김경진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질의한 내용 중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이름이 KIST 상징 조형물에 새겨져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 원장에게 다시 질의했다 “그 조민이 그 조민이 아니죠?”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라고 답을 했다.

(3)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2차 국감장 “대통령 기억력 걱정”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요즘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다”며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를 꺼냈다. 이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국무회의에 복지부 장관님도 계셨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진짜 병신 같은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민주당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않느냐”고 맞고함을 쳤다. 이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았았네” 라면서 “진짜 병신 같은 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 놓고 본인이 더 난리쳐요” 라고 말했다. 이말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뉴스 등에 옮겨져 윤리위제소 등으로 확산되었다.

(5) 행안위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탄핵되어야 할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장관을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씨’라고 지칭한 것을 놓고 여당의원들이 문제리를 제기하면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할 의원들이 한두 명입니까. (말조심하세요! 야!)”라고 하였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라고 하며 응수하였다.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는 이 말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6) 행안위의 대구시청 국정감사 “수구도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새마을장학금' 관련으로 “지난 5년간 대구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000만 원에 달한다”며 “대구시민들은 이해할지언정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개혁·혁신 같은 단어로 대구를 상징하라”며 “대구시장이 광주와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을 맺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로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 때문에 대구가 수구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라고 했다. 이에 조원진 공화당 의원은 “대구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이지, 대구시민에 대한 감사냐”라며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대구시민을 수구꼴통으로 이야기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7)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 “무기력감, 박탈감”

10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온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어 인기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대학원생은 조 장관 딸의 특혜입시·장학금 등 의혹들을 언급하면서, 해당 의혹들로 인해 무기력감·박탈감 등을 느꼈다고 밝혔다.

5. 국정감사장 앞 시위

(1)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시위

10월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서울대 시설관리직

(청소·경비·기계·정비) 노조 시위 탓에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조합원 140여 명과 청소·경비분회 조합원 290여 명은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서울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 제2 제주공항 저지시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8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격한 항의농성이 벌어졌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은 이날 아침부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오전 9시30분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청 앞에 도착하자 농성을 하던 시민들은 버스를 둘러싸고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3)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10월 10일 시공사인 금호산업 본사와 국회 앞에서 육상풍력단지 허가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가졌다. 상경한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송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시공사인 금호산업(서울 종로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동의 없는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정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청송 면봉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은 곳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청정 청송의 막대한 산림과 생태계 훼손, 그리고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6.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피감기관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직위의 피감기관장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 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정책점검 차이는 없었지만, 조국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언론의 조명이 달랐다.

피감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일	주요 국정감사 수감내용	인사 청문 보고서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2017-06-23	조국 전장관 집 압수수색 관련 압수수색영장 남발문제	통과
외교부장관 강경화	2017-05-26	지난해 국감에서는 말실수(5.24 해제)로 첫날 파행 북미회담과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방안에 집중 질의를 받음	미채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17-06-02	야당의 수도권 부동산가격인상우려에 대해 과열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응	보고서 채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017-07-06	문케어, 복지정책 조명	보고서 채택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2018-03-06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침	보고서 채택
경찰청장 민갑룡	2018-06-20	검경수사권 독립 등 검찰개혁 실리추구 국감장에 부장검사가 최초로 참고인으로 등장, 버닝썬 수사 미흡 부담	보고서 채택
국가인권위 위원장 최영애	2018-07-23	지난해 코드인사라는 오명을 얻었고, 이번에는 아직 미 실시	보고서 채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2018-09-03	조국 딸 문제로 입시제도개혁 모색	미채택
국방부장관 정경두	2018-09-03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 야당으로부터 북한의 대변인이란 말을 들음 군사법원에서 내년 총선 출마여부가 질의됨	보고서 채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2018-09-03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	보고서 채택

피감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일	주요 국정감사 수감내용	인사 청문 보고서
		싼 여야 공방에 곤욕	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2018-09-03	버티는 이재갑 장관 “52시간제 보완책 보다 국회 입법이 먼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논의 가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10월 중으 로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입법 상황을 지 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	보고서채 택
합동참모의장 박한기	2018-09-21	일본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	보고서채 택
환경부장관 조명래	2018-10-10	자원순환정책 쓰레기산 질타 ASF 초기판단 잘못(북한 영향에 부정 적	미채택
한국방송공사 사장 양승동	2018-11-05	'KBS 근조',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등의 피켓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시청료 납부거 부운동, 기자성추행 대책 추궁당함	미채택
부총리 겸 기재장관 홍남기	2018-11-16	“성장률 목표 달성 어렵다“ 공식화 “법인세율 개편 계획없다… 내리면 세 수 결손 우려“	보고서채 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2019-03-13	토쿄올림픽에 참여할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	보고서채 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2019-03-13	내년 주 52일근무제에 대해 회의적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소회를 밝힐 정 도로 자신감 피력 “위원님들과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준비를 많 이 하신 분들의 지적이 앞으로 업무수 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맺음	미채택
통일부장관 김연철	2019-03-13	남북관계 경색, 월드컵예선 남북축구 경기 미중계 등으로 질타를 많이 받음	미채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2019-03-13	함박도 영토 논란에 대해 공방	보고서채 택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019-03-13	해운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으 나, 권력실세 친인척 지원 관련 집중 추궁을 받음	보고서채 택

피감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일	주요 국정감사 수감내용	인사 청문 보고서
국세청장 김현준	2019-06-03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무조사 총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	보고서채 택
검찰총장 윤석열	2019-06-20	대검 국정감사에서 인사청문회때와 달 리 야당의 격려와 여당의 검찰개혁 주 문을 무리없이 받았다는 평가	미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2019-08-14	5G 진흥책과 혁신성장 방안 등	미채택
법무부장관 조국	2019-08-14	법무부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15일 하루전인 10월 14일 사퇴함	미채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2019-08-14	ASF 대응책 미흡으로 질타를 받았고, 5월 북한 발병 소식 때 제대로 대처했 어야 한다는 양당으로부터 혼쭐	보고서채 택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2019-08-14	아직 실시되지 않음 (10.23)	미채택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2019-08-14	공정위 내부 인사 계획부터 일감 몰아 주기 규제, 플랫폼 사업자, 가맹사업 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차분이 답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문제로 파문을 일으켰으나 올해에는 없었 음	미채택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2019-08-14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 에 대해 책임질 일 사안이 있으면 책임 을 묻겠다는 견해	미채택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2019-08-14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보이 콧한다는 의미로 의자를 돌려앉음	미채택

IV. 상임위별 국정감사 활동 편린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1) 개관 및 특징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 21일 종합감사까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 모두 76개 기관이다. 2019년 3월 문을 연 수원고법·고검과 수원가정법원 등 3곳이 새로 추가됐다.

피감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증인 333명 이외의 일반증인 채택은 없었다. 현재와 법무부 국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가 각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실시했고,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김오수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수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승전 ‘조국’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질의에 집중되었고, 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욕설 파문 과 명재권 영장전담부장 판사의 증인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였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 (수)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문회의 설치에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10. 4. (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와 현재의 국선대리인 선임 실적 부진 문제 등 정책감사와 함께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 8월 이미선 재판관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청문회 당시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에게 감사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오후 국회에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인권법연구회 소속 김형연 법제처장의 자격이 논란이 되었다.

10. 7.(월)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쟁점이 됐다. 여당은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 과잉 수사를 펼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장관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특수 2부로 옮겨간 과정, 압수수색 결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을 향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철저히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여당은 또 검찰이 처음부터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정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여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과거 유리할 땐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 압력을 넣는다고 지적했다.

10. 8. (화) 대전고법에 열린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국정감사에서는 특허법원 국제재판 활성화,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념편향성 우려, 지역 유력인사의 재판 지연 문제, 판결문 공개와 실명화 확대,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결요구 등이 이어졌다.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가정폭력 발생시 신속한 결격조치 필요, 계룡건설과 조달청의 유착사건 문제, 광주지역 유력인사 봐주기 수사 지적 등이 나왔다.

10. 10.(목)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 논란이 쟁점이 되었고, 검찰개혁의 방향성,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 상황, 서울시의 태양광사업 친여 인사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10. 11. (금) 대구고법에서 열린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명재권 부장판사의 조국 동생 영장기각과 관련되어 여야간의 공방이 있었고, 판결문 공개 등 정책국감을 실시하였다.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대구고검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업자 별장 소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네이버 검색 1위에 오른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팩트 확인질의가 많았고, 조 장관과 그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10. 14. (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명재권 부장판사의 출석을 놓고 여야간의 격돌로 파행을 빚었고, 오후부터 조국 논란이 계속 되었으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소식에 한차례 술렁였다.

10. 15. (화) 국회에서 열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이슈가 계속 되었고,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장관을 대리해 출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필요성을 한층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것은 국감을 무력화하기 위한 ‘국회 무시’라며 공세를 계속했다.

10. 17. (목)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했다.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데다, 윤 총장의 동반 퇴진 시나리오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의도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 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로 삼으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10. 18. (금)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함박도 문제, 지소미아 파기의 문제점, ASF 바이러스 전염원으로 알려진 멧돼지의 철책선 월경여부, 북한의 비핵화 문제, 남북 축구경기 중계 불발 등의 문제를 조명해 군사법원 관련 이슈는 사라졌다.

10. 21. (월) 국회에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만 남겨 놓고 있다.

2.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1) 개관 및 특징

정무위원회는 24명의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이 구성되어 10월 2일 국무총리비서실 필두로 11일동안 4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11일 중 하루 현장 시찰을 하였고,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선서 및 증언 거부로 인해 일시 파행을 하기도 하였다. 조국 펀드 논란과 조국 딸 인턴 증명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무난한 국감을 전개했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대정부질문에 이어 크게 조명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3당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한 했다.

10. 4.(금)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몰아붙이

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10. 7.(월)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부터 전면적으로 바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 명단을 원사업자가 지정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선정 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를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위의 감시활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각종 불공정 행위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경제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0. 8.(화)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10.1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할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이

면 권한을 행사했느냐를 떠나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훈처 국감에서는 하재현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훈장 수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11. (금) 국립괴산호국원(괴산)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였다.

10.14.(월) 국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4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주요 대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선불리 예단하기 힘들지만, 최근 항공업 환경이 나빠진 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전망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은 '(항공업 환경 악화는) 단기적 문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수 의사가 있는 기업이라면 인수 작업에 나서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10.15.(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응동학원에 대한 캠프의 채권 회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응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17. (목)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수능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이 가진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입시제도와 같이 가야 하는데 현재는 객관성·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수능 시스템을 조금 더 다양화한다면 시대 사회 변화가 요구하는 논술식 등 새로운 시스템 변화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0.18. (금)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종합감사

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따른 제청권자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와 아프리카 돼지열풍의 초기방역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선서 전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대에 섰다. 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10.21.(월) 국회에서 열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만 남겨 놓고 있다.

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1) 개관 및 특징

기획재정위원회는 26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기획재정부 등 29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첫날 국정감사 도중 ‘소주성’ 관련 증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파행을 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감사를 21일이 아닌 23일과 24일 국회에서 실시한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 (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조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증인의 증언 내용으로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10. 4.(금)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율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이나 세율 조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현행 법인세율은 ▲3000억원 초과 구간

25%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 22%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으로 돼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018년부터 생겼다.

10. 8 (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지 관심이 모았다. 2달 연속 이어진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속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에 대한 한은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10.10(목)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의 세금탈루 의혹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경심 교수가 상속세를 납부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10.11(금)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통계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기재부가 지난달 1인 가구를 뺀 자체계산을 통해 지니계수가 좋아졌다고 발표한 건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과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 분석 방식은 자율의 영역이고 계산상 수치가 틀리지도 않았다고 왜곡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14(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이 매년 줄고, 매출액 증대와 남는 시설·인력 활용을 위해 추진한 해외사업도 매년 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10.15(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파견 문제를 두고 질의를 벌이다 충돌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세무조사 때문이 아니라 공익법인 관리 업무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업에 대한 비정기조사 관행과 서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기업의 자율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기조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야당은 서울청의 조세

소송 패소율이 높은 점을 거론하며 부실한 세무조사를 질타했고, 서울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복잡한 자본 거래로 법리 다툼이 많아 패소율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10.17. (목) 지방1반은 한국은행전북본부에서 열린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은행 충북본부 국정감사를 진행해 지역현안을 점검했고,

지방2반은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부산본부 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0. 23. (수) 국회에서 열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10.24.(목)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가 열린다.

4.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1) 개관 및 특징

교육위원회는 16명의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교육부 등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지방국립대학교와 국립병원,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반을 나눠 편성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시찰 1일을 포함하여 8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질의가 많이 나왔으며, 입시제도의 개선대책을 조명하였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수)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되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 논란이다. 야당은 조 장관 자녀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입시 부정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연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10. 4. (금)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과 조국 장관 자녀 장학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협의회 임원 전반의 학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조국 장관 자녀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침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면 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0. 7. (월)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학교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였다.

10.10.(목)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환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국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당시 정식 인턴 공고가 없었다는 점과 센터장과 조 장관의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나경원 의원 아들의 논문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해외대학교 입시를 위해 제출한 논문포스터

에 서울대 소속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 여당 의원들은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스펙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입시제도를 꼬집으며 대학 관계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10.14. (월) 감사1반(반장 이찬열)은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였다.

감사2반(반장 김한표)은 오전 경북교육청에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오후 경북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10.15.(화) 감사1반은 오전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2반은 오전 경상대학교에서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을 진행했는데, 부산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부산대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자체 조사나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입시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의 통합 문제와 교수들의 비위 행위 등 지역 대

학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는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과 관련해 학생 간부들의 의견만 묻는 등 학생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과 연구비 부당집행 등 교수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을 비판하고,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오후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학교법인 응동학원 의혹을 둘러싼 야권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안전성평가 조차 받지 못한 업체 동원해 석면제거 시행하고 있다고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10.18.(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조민 씨의 본인 동의 없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조민 씨의 입시 의혹 등이 불거졌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10.21.(월) 국회에서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1) 개관 및 특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82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시찰 2일을 포함하여 12일동안 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하였다.

조국 전법무장관의 딸 KIST 인턴과 관련된 질의가 많았고, 야당이 풋말 피켓팅 시위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이나 KBS 사장 등 피감기관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5G 진흥책도 쟁점이 됐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조 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키워드가 올라온 것은 조작이라며 제2의 드루킹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 부인이 인수한 의혹을 사는 2차 전지 회사가 기준미달에도 정부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것을 과기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5G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책의 빈틈을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강화에만 집중한 탓에 5G산업의 패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은 5G가 자동차나 의료 등 다른 분야와 융합되는 만큼 보안 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 4. (금)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서로 상대방이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경제 성과와 검찰 개혁 필요성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같은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관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야말로 각종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한 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억지라고 일축했다.

10. 7. (월)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는 일제히 원자력발전소의 부실 점검 및 건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방도 일부 오고 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 안전 문제와는 별개임을 주장, 제1야당인 자

유한국당은 산하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탈원전 정책의 허점이 있다고 맞섰다. 라돈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 드론 안전성 문제, 북한 방사성 물질 피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거론됐다.

10. 8. (화)에는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현장시찰을 하였다.

10.10. (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딸 논문의 연구 윤리 문제가 논란이 됐다. 조국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자녀 논문이나 입상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오른 것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 중이며,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 감시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주로 교수들로 구성돼, 짬짜미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노정혜 이사장은 현직은 교수지만 변호사나 판사 출신인 분들이라며, 2기 인선에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10.11. (금)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딸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이 쟁점이 됐다. KIST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KIST 인턴 기록이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 딸은 당시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이다. 야당은 조국 장관 딸이 KIST를 출입한 기록조차 없다며 조국 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추궁했다. 야당은 당시 KIST가 방문증을 발급해 출입을 통제할 만큼, 출입기록 없이도 인턴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는 조국 장관의 말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질타가 계속되자, 이병권 KIST 원장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교수들 비롯한 담당 연구자들에 대한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와 특허 활용률, 부실학회 참여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감사 제도 추진을 두고, 부실학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기관에 감사권한을 맡길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이밖에 여당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전무한 우리 연구품토의 문제점을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과학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0.14.(월) 국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편향보도가 쟁점이 됐다. 고용 형태나 적자 경영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야당은 MBC가 서초동 집회만 집중 보도한 점을 질타했다. 또, 보도국장이 타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초동 집회인원을 100만이라고 규정지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굳이 집회 인원 숫자를 보도한 점이나 보도국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MBC의 고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지만 프리랜서나 계약직 고용에 있어 아직도 사측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15.(화)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보안 정책,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보안 문제 등의 질의에 집중했다.

10.17. (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는 KBS

보도 외압 의혹과 여기자 성희롱 논란 등에 대한 KBS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된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 결정 보류에 대한 KBS 대응을 문제 삼았다. 외압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어야 할 양승동 사장이 두 차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벌어진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공영방송이 개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농락을 당하고 대응 또한 미흡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는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10.18.(금)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알뜰폰 시장 위축과 화웨이 통신 장비 보안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여당은 통신사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이 추진되는 등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환경에 맞춘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가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흡수되면서 알뜰폰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화웨이 통신 장비에 정보 탈취 등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환경 개선과 R&D투자 확대, 포털 실검 서비스 폐지 등을 주문했다.

10.21.(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

(1) 개관 및 특징

외교통일위원회는 22명으로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31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국내에서 4일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해외에서 11일 감사를 진행하여 총 15일동안 감사활동을 전개했다.

대북관계 경색, 지소미아 문제,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한 조명이 있었고, 조국 딸의 몽골봉사활동이 진짜인지 여부도 주목되었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 (수)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10월 5일 열린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진행 과정과 전망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도 쟁점이 되었다.

10. 17. (목) 국회에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깜깜이 남북 축구 논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은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진전 없는 비핵화 논의나 북한의 쌀 지원 거부 등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예선 남북한 경기가 깜깜이로 진행된 것은 현재 남북 관계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선수들이 느꼈다는 부상 위험에 대해 북한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북한에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한, 여야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18. (금)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경력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전 장관 딸이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코이카 측에 봉사활동 기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조 씨의 몽골 봉사활동 서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담당 인솔교사 등을 통해 조 씨의 봉사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코이카가 주최한 봉사활동이 아닌데, 편법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10. 21. (월) 국회에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7.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

(1) 개관 및 특징

국방위원회는 17인의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64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4회의 현장시찰을 포함해 11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함박도 문제에 대한 질타와 최근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새로 감사가 시작된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감사에서 함박도 초토화계획이 이전 정부에서 북한도발당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수)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벽 발사된 미상 발사체와 관련된 질의와 함박도의 영토성, 북한의 함박도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추궁하였다.

10. 4. (금)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종 병역면탈 사례로 병역을 면제받는 실태를 두고 병무청에 공정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병무청이 병역면탈을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검토해보겠다”며 “행정착오 대상자가 귀국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전문연구 요원을

비롯한 이공계 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오후 과천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10. 7. (월)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산 무기구매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거론해온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들이 한미 정상 차원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0. 8.(화)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움직임 등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 갑) 간사는 “현재 우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

10.10.(목) 해군본부(충남계룡)에서 열린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핵잠수함 사업은 참여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 외부에 알려지며 중단된 바 있다. 2003년 중단된 핵 잠수함 사업이 16년만에 본격추진되는 셈이다.

오후 공군본부에서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10.11. (금) 육군본부에서 열린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이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고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현재 46만 4천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대상

부대 2천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2025년까지 나머지 1천451개 부대의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10.14.(월) 해군 제1함대사령부 육군 제23사단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였다.

10.15.(화)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군사합의' 이후 훈련 감소로 인한 전력 차질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으며, 함박도와 관련해서 해병대가 현 정권 이전에 초토화 계획을 세워 시행하려고 하였음이 밝혀졌다.

오후에는 서북도서 지역 현지 시찰을 하였다.

10.17.(목) 대구 육군 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드론 공격 대응대책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내외에서 드론 공격 및 감시 사례가 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후에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였다.

10.18.(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였다.

10.21. (월) 국회에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해숙)

(1) 개관 및 특징

행정안전위원회는 22명의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등 32개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국정감사를 하였다. 11일동안 감사를 하였는데, 대구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현장시찰로 변경하여 질타를 받기도 하였으며, 감사위원 간 막말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의 고발장 접수 등이 화제가 되었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 (수)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진영 장관에게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 아닌지 물었다. 또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기 싸움이 펼쳐졌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개별 기록관 건립 논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용역보고서의 연구책임자가 과거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자문위원“이라고 밝혔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문제가 행안위 국감장을 달구자 행안부는 이날 별도의 해명 자료를 냈다. 함박도 관할권 논란도 있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정책을 펴니 북한이 자기네 땅처럼 하는데 잘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 대표 아들과 딸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아빠 찬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저녁 국감에서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북상에 재난안전 상황 관리를 위해 진 장관이 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해야 한다. 상륙이 됐기 때문에 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실장이 가 있어 관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오후 10시 15분까지 자리를 지켰다.

10. 4. (금)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는 10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일상적 집회 수준을 넘어 청와대와 경찰을 무력화하려는 내란 선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집회 주도 단체에 현직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사실 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평화적이었던 광화문 집회에서 야당 의원이 마치 내란을 선동한 것처럼 민주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에게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광화문 집회는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으나 일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 7. (월)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벨브

가 쪼개지며 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문제를 놓고 집중 질타가 이어졌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참한 해당 제조업체 대표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0. 8. (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계류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앙선거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주권주의 △직접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조인 독일에서 헌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0.10. (목) 지방1반(반장 전해숙)은 오전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은 현장시찰로 진행되었다. 국정감사를 갑자기 전시성 일정으로 대체해 안팎의 비난을 받았다. 국민을 대표해 피감기관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끌어내야 할 국회가 도리어 편의 봐주기에 나선 모양새라 비판이다. 미제사건 수사팀 및 112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변경됐다.

지방2반(반장 이채익)은 오전 전남도청(무안)에서 전라남도 국정감사를 하고 오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하였다.

10.11.(금) 지방1반의 오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유 부시장의 비위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됐지만, 감찰이 중단됐으며, 조 장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유 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적은 있지만 조 장관을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부산시가 최대 주주인 아시아드 골프장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후에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을 국정감사했다.

지방2반은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하였고, 오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하였다.

10.14.(월)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펀드 운용사 관련 서울 지하철·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조국 법무부 장관 펀드 운용사 관련업체인 PNP 컨소시엄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리하게 PNP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누장 대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일대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여야는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놓고 공방도 벌였다.

10.15.(화) 지방1반은 충남도청에서충청남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충남지방경찰청(예산)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하였다.

지방2반은 오전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시의 초동 대처 미흡과 사후 처리에 대한 질타로 집중됐다. 박남춘 시장은 "사태 발생 직후 환경부에 원인 조사를 자처하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 시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상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지하상가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르 하였다.

10.17. (목)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과 친한 친구라는 사실만 부각되는 총재가 아니라 정부가 잘 못 하는 것은 꾸짖고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총연맹 총재이기를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박종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향해 연맹이 남북 판문점선언 등을 지지한 성명은 내면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성명은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10.18.(금)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탄원서와 연예인 설리의 사망 동향보고서만 부각되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교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사안도 집중되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 외부유출에 대한 경위 등을 강하게 추궁한데 이어 개선을 요구하며 소방본부장 뿐 아니라 이 지사에게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저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0.24.(목)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

(1) 개관 및 특징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인의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75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일수는 현장시찰 3일을 포함해서 총 10일간이었고, 현장시찰을 제외한 감사는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였다.

감사전날인 10월 1일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난행을 겪었는데, 국정감사 도중 2차례 증인채택 논란으로 감사가 중단되었고, 감사시간은 대부분 5시 조금 넘어서 종료하였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수)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예술원사무국 한국정책방송원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나간 가운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SOK가 법인화 지원을 명목으로 받은 국가예산 10억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문제제기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장외 방어전을 폈다.

10. 4.(금)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정감사에서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유물 보존처리를 위해 별도의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유물 보존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자 “능력이 턱없이 모자라 박물관 유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센터 건립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박물관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박물관 북쪽 영역에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에는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가 있었다.

10. 7. (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져 결국 오전 파행을 하였다. 문화재 보호대책 등이 조명되었고,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가 등장했다.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심의에서 부결된 증도가자는 모두 101점인데, 전체 실물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안민석 문체위원장도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일정 정도 사실인지 밝히는 일은 역사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라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 8.(화) 게임 업계(엔씨소프트)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였다.

10.10. (목) 국회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불법 사행산업과

도박중독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불법 도박 산업 규모와 청소년 도박 유병률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10.11. (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었다.

10.14.(월)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 월드컵 예선전 '평양 원정' 생중계가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의원은 “(이번 경기는)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의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일정한 의무가 있다”며 “상대국 중계 및 취재 허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단 핸드폰까지 압수한단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런 처사는 국제사회 규범이나 관례에 전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 의원으로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10.15.(화)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였다.

10.17. (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영화 등 영상물의 폭력성·선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로 판정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조커'와 '기생충' 등 유명 영화들을 거론하며 영등위의 관람가 등급판정이 일반여론의 인식과 동떨어졌다고 꼬집었다.

10.21.(월)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1) 개관 및 특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인의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34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10일동안 감사가 진행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

병의 확산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첫날 국정감사가 취소 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졌고, 해운사업 관련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었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4. (금)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전염병 관리 미흡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사 지원 불공정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밖에 여야는 태풍 미탁으로 양식장 붕괴 등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복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0. 7.(월)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연구 과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20억원을 투자해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지도 감독기관으로 책임을 같이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하고 변상 문제를 깔끔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안정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성만 고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10월 28일에 최종 손실금이 확정되면 변상 관련해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8.(화)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를 질타하는 동시에 사업 효율 개선과 농어민 지원 확대, 여성과 장애인 채용 확대, 청년 농어인 육성 등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10.10.(목)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황호선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또한 여야는 수산물의 생산·유통과정의 위생 및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10.11.(금)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

공사 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4.(월)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에 질타가 이어졌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댐 설치 비율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와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5553건으로 2017년 2384건 대비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불법산림훼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임산물 유통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10.15.(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상 방안과 양돈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 지역의 농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라면서, 선포 기준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야당은 돼지 가축분뇨 처리 문제 등 양돈농가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양돈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10.17. (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마사회의 경영 실태와 불법 경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마사회의 직원 평균 연봉이 9천209만원으로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중 가장 높았던 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임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다“며 “사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임금 수준도 손을 당연히 대야 하는데 마사회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10.18. (금)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정부 방역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야생 멧돼지로 인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대처가 늦어 북한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이번 기회에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10.21.(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

(1) 개관 및 특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인의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61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도중 이수혁 의원의 사퇴와 정은혜 의원의 의원직 승계가 있었다. 현장 시찰 1일을 포함해서 11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소미아 대응책 등 산업전반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였는데, 이종구 위원장의 참고인에 대한 욕설 파동이 회자되었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 (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I(산업·통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연구개발이 차질 없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의 각별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 지난 3년간 산하기관들의 별칙성 부과금 납부 금액이 820억 원에 달한다며 운영실태 점검 강화와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10. 7.(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II(에너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탈원전 정책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면서 “경제적 손실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적극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경제적 손실을 질타했다.

10. 8.(화)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의 매출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점포 5개 중 1개꼴로 일 매출이 150만원으로 영업이익 적자인 이른바 ‘저(低)매출 구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현재 3만개까지 스마트공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구축 완료 후 1년 이내 폐업기업이 48개에 달했고, 폐업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4천162개였다”며 “스마트공장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10.10.(목)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무역사기 문제, 일본의 무역 규제에 따른 활로 모색 등 정책질의를 하였다.

10.11.(금) 나주 한전본사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뜨거운 감자’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여야는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전만 반복한 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개교하기 위해 설립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 한전이 막대한 설립비 1조80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내부 비리 및 방만경영 문제

적 지적되었다.

10.14.(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력Ⅱ>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대책과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운영되는 국내 원전 11기 가운데 8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야당은 탈원전과 석탄발전소 폐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우려했다. 전력 수급 안정과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충남 태안군 일대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과 석탄재 매립지 조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10.15.(화) <자원>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사고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가스안전공사가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질타했다. 지난 5월 발생한 강원 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지적하면서 미리 사고 위험성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 부실도 지적 대상이었다. 공사가 검사를 실시했는데도 사고률이 높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가스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해마다 늘고 있는 도박 중독 문제가 다뤄졌다.

10.16.(수) <중소기업 등>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합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에 대해 여야는 무책임한 부실경영 실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개국 이후 5년간 적자행진을 벌이

는 공영홈쇼핑에 대해 여야가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자본금 절반을 까먹고도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무리하게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따졌다. 여야는 또 공영홈쇼핑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문제를 외면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창업진흥원 국감에서 야당은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업체들의 역량 부족으로 창업 보육활동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밖에 야당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영홈쇼핑의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했다.

10.17.(목) 현장시찰을 하였다.

10.18.(금)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달랐다. 여당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산업 추진이 계획보다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전력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도 가능하다는 여당과 세금으로는 안된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했다.

여당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립대 설립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도 지적됐다.

10.21.(월)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1) 개관 및 특징

보건복지위원회는 22명의 국회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45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회의 현장시찰을 포함하여 1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케어,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 등이 집중 논의 되었고,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치매 걱정 발언으로 파행되기도 하였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수)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능후 장관은 청와대와 물리적 거리가 먼 부산대 교수를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해 '허수아비 주치의'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특정 의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 비서실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로 국민연금 재정과 문재인 케어 등이 질의이 주체였다.

10. 4.(금)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치매 걱정'으로 오전 한때 파행되었다. 김 의원이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문제를 언급하면서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감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고성 섞인 말싸움이 오갔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는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됐던 의학논문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10. 7.(월)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인보사 케이주' 허가 취소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이의경 식약처장이 교수시절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업체의 실질적 경영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정숙 의원)

10. 8.(화)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는 개원 이래 초유의 파업 사태로 진료 차질을 빚었던 국립암센터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 야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립암센터 노사가 암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임금 협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암 환자들에게 고통을 초래한 국립암센터 노동조합 파업이 연례화될 것을 우려하며 암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10. (목)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쟁점이 됐다. 여당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기반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기업의 잘못된 정책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밖에 국감에서 여당은 장애인 대면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했고, 야당은 연금 지급 국가 보장 명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14.(월)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정책이 쟁점이 됐다. 특히 재정 적자 문제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올해 공단 재정 적자가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고갈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높다고 밝혔다. 야당이 우려하는 재정 문제는 대비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금 적립금 20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사용하면서 회계적으로 적자로 나타나지만 아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산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경감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 보험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개선 촉구했다.

10.15.(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대한적십자사를 두고 혈액백(저장용기) 담합 등 운영 부실과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박경서 적십자사 회장은 “거듭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적십자사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조직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60세 정년 보장’ 탓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 혈액백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 올해 7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하면서 의혹이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10.17. (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아동권리보장원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매일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하는 등 후진국형 결핵 발생율과 사망률이 각각 OECD 1위를 차지해 정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18.(금) 부산 침례병원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였다.

10.21.(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1) 개관 및 특징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의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7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현장시찰 2회를 포함하여 12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였다.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에 대한 정책 조명이 이루어졌으며,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되었고, ASF 확산에 대한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루어졌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 (수) 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정감사에서는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들의 화학물질 불법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 문제 등을 따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4.(금) 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습고용 등 고용기회의 박탈, 열악한 고용환경과, 현실과 다른 고용지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의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고용지표를 근거로 고용 사정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맹공격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박 시장이 뭐라고 했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때놓고 지금은) 감사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비아냥거린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채용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10. 7. (월)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정보와 관련된 남북교류 제안도 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기상청의 예보능력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 기관 중 불신이 가장 높은 곳이 기상청”이라고 하였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요즘도 ‘중계청’, ‘오보청’, ‘구라청’이라는 불명예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어민들은 일본 일기예보를 보고 출항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굴욕적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석 기상청장

은 “올해 태풍은 일본과 미국보다도 한국이 우세하게 진로를 맞췄다”며 “앞으로 태풍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10. 8. (화)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된 면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10.10.(목) 국회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석탄재 관리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의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환경 당국이 시멘트 원료로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측정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의료폐기물 1천여t을 소각하지 않고 창고·노상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경북 고령군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아림환경'과 감독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을 강하게 성토했기도 했다.

10.11.(금) 국회에서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인권 사각지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사전 관리감독 부실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등이 발생했는데도 사후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10.14.(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환경오염물질을

연평균 10차례 이상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29곳이 51차례에 걸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9곳은 2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10.15.(화)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문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준수,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10.16.(수) 하남 유니온파크를 시찰했다. 경기도청 국정감사는 취소되었다.

10.17. (목) 오전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시찰했다. 오후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시찰했다.

10.18.(금)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은행 등의 대기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초기에 멧돼지 감염이 의심됐는데도 환경부가 초기에 배제하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파주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인했을 때 멧돼지 서식 흔적이 나오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 시중은행 점포 대기표를 뽑아보겠다. 이런 대기표나 영수증에 비스페놀A라는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의원들은 안전기준 등을 담당할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고,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10.21.(월)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14.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1) 개관 및 특징

국토교통위원회는 30명의 국회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32개 피감기관에 대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반을 편성하여 하루에 두곳을 감사했고, 10일동안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국회보다는 현자에서의 감사를 많이 하였다.

조국 국감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박원순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날선 공방전이 언론에 회자되었다.

(2) 일정별 국정감사

10. 2. (수) 정부세종청사(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놓고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 사이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10월 1일 발표된 '관리처분인가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민경욱 등 여러 의원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퇴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집값) 과열 상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해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유예기간 6개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일부 보도와 달리, 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이날 국감장에서 다시 확인했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보도된 대로 총선 불출마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인했다.

10. 4.(금)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LH가 회사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LH가 공공성 강화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높은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재정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7.(월)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에스알 코

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국정감사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상 회계오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천억원 이상의 회계오류가 적발된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의 망신”이라며 “고의성이 드러나면 분식회계로 중대 범죄이며, 고의성이 없어도 중대과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5년간 산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가 583명에 육박한다고 밝혔고 이어 583명의 사상자 중 코레일이 발주한 외주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발생한 산재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외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

10. 8.(화) 지방1반(반장 박순자)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제주 제2공항 건설,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체제 개편, 대형 개발사업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지방2반(반장 박덕흠)은 대전광역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방법론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0.10.(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태풍 ‘미탁’ 상륙 당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행적을 놓고 공방이 오가 파행까지 했다. 이강래 사장은 10월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태풍 ‘미탁’ 상륙 상황을 지휘하기 위해 국토위 허락 하에 자리를 떴다. 재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강래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위원들의 판단이었는데, 이강래 사장이 집에서 TV를 보며 지휘했다는 발언을 하여서 질타되었다. 또한, 10월 9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과 사측이 ‘직접 고용’에 합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10.14.(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5년 316건에서 2019년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10.15.(화) 군산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는 투자유치 부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10.17.(목)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불공정하게 채용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를 서울시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차를 어겨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게 드러나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등을 권고했는데도 박원순 시장이 불복하고 있다고 맹공을 벌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조직적 채용비리가 없다는게 확인됐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직원의 처우를 개선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처음 임면하는 것처럼 잘못 법 적용을 한 것이라며 친인척 비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서울교통공사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방어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평가절하 했다.

여당은 또, 현재 자체 조사 결과와 감사원 결과가 차이는 있지만 채용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를 옹호하는데 주력했다.

10.18.(금)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부정 채용 의혹과 감사원의 조사 대상 외에 기존 직원들도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재(한)의원도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직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관련 직원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1.(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V. 촛불정권에서도 낙하산, 비리, 혈세낭비 여전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정권이라는 의미의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낙하산 인사, 각종 비리, 혈세낭비 등은 여전하여 ‘조국 국감’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 낙하산 인사

(1)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이배)가 10월 13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에 의하면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임이 나타났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47개 기관의 총 임원 수 3,3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15명으로,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어, 여전히 심각한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기관장·감사)수 중 낙하산 인사 수의 비율 값으로 산정하였음)고 한다.

(2) 서울 사회서비스원, '박원순 낙하산' 의혹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유독 서울에서만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 인사'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복지 관련 전문성과 경력이 없는 박 시장 측근이 원장으로 임명되고, 실무진에도 복지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없는 인사가 절반에 달한다며 박 능후 보건복지장관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익법인으로 현재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광역단체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했으며, 올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6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경기·대구·경남은 사회서비스원장이 모두 복지전문가 출신인데, 서울만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출신으로 박 시장의 노동보좌관과 정책특보를 지낸 주모 원장이 임명됐다는 것이다. 주 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 부정, 비리 의혹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호' 인천공의 “채용비리로 추락”

10월 18일 항공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친인척 채용비리가 화두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1호' 정규직 전환 사례였던 인천공항공사의 채용비리를 놓고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채용세습' 논란이 일었던 LH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첫번째 사례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3,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1만 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다. 채용평가표가 없는 사례가 5,600여건, 비공개 채용이 800여건, 기존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90건에 달했습니다. 이때문에 노조를 중심으로 “앞으로 남은 전환대상자 6천여명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본사 전무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없이 채용되기도 했고, 현장 소장이 직원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고...”라고 질타했고,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공개채용 경쟁률을 보면 190:1, 최소

99:1이에요. (채용비리는) 청년들, 취업준비생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불신과 좌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채용비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며 내부에서도 협의체를 꾸려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2) 허위연구 장려금·미성년자녀 논문 등재 심각한 서울대 교수들

허위 연구실적을 만들어 대학 연구장려금을 받고 정부지원 연구과제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기’를 하는 등 서울대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교수 6명은 총 11편의 논문에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9편의 논문은 교육부 등에서 381억원의 지원을 받은 정부 연구과제였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연구사업이 교수 자녀의 ‘스펙 쌓기’에 활용된 셈이다. 일부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부당저자(미성년 저자)가 포함된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 받아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와 서울소재 주요 6개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총 16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7.48%였다. 특히 이들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기업으로부터 평균 4720만원을 받았으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교수도 15명이나 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대학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대 교수 12명이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로 적발된 바 있다.

(3)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비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 임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안 의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은 총 27명(2018년 20명, 2019년 7명)에 달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직무관련자들로부터의 항응을 제공받는 행위, 출장비를 허위로 조성해 개인이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정직 6명 △견책 10명 △감봉 4명 등 총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7년에는 여직원 6명에 대한 성추행 등으로 파면을 당한 직원도 있었다. 올해에도 하도급업체에게 골프등산용품 등을 지급받고, 용역정산업무 소홀로 준공된 용역 정산금을 미회수한 행위 등으로 △해임 2명 △감봉 3명 △견책 2명 등 총 7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원들이 비위행위로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가운데, 실적 또한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문을 통해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의 비정상적인 회사운영과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월권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덕수 사장대행은 지난 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부 폭원과 관련해 “죄송하다. 수량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과기정통부 소관기관 채용비리 74건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46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직유관단체 등 60개 대상기관 가운데 31개 기관에서 7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5) 관세청, 반복되는 비리에도 ‘제식구감싸기’ 의혹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비리, 인사개입 등으로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 검사출신의 관세청장이 임명됐지만 기강 해이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 건수는 총 41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111건은 전 관세청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통보된 건으로 지난해에는 49건,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43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관세청의 ‘제식구감싸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 관세청장 임명 이후 불문,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이 83건으로 총 111건 중 진행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87.4%에 달한다. 앞서 SBS 보도를 통해 관세청은 금품·향응수수, 해외성매매, 짝퉁밀수, 사익추구, 인사청탁, 휴대품 면세통관, 제식구 봐주기 수사 등 비리가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관련자 16명 중 불과 4명에게만 중징계 자체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6) 그랜드코리아레저(GKL), 1350만여원 골프접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는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보고까지 시도한 일이 있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GKL의 임직원 10명은 한 카드사로부터 1박2일 골프 2회 등 총 6회에 걸쳐 총 1350만여원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내부감사를 받게 되자 골프 회동에 참여한 사실은 삭제한 상태로 공문을 다시 받아 허위로 보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다. 이들 중 1·2급 간부 2명은 지난해 1월31일 면직 처분됐고 3급·5급 직원 3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4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처분을 받았다.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에서도 VIP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이 유흥업소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GKL은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의 콤프(고객이 잃은 돈에 대한 적립금) 만큼 연간 수억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주고 있다.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1270명의 외국인 VIP고객 대상으로 총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2017년 이를 지적했고 GKL은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었지만 올해도 성매매 알선,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된 3곳의 업체에서 GKL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하루속히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7) 제주혈액원, 직원의 1/3이 다단계 판매원 가입 부업

직원이 겸직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제주혈액원은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돼 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00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만 '경고' 조치를 받았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았다.

(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채용비리

채용비리도 여전히 적발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에게 자격증 점수 10점을 주고, 결과적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서도 전수조사 결과 총 74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면 개인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다.

(9) 국토위의 서울시국감서 교통공사 채용비리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의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 대상자 192명이 재직자 친인척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대상이 대부분 환경미화원, 식당조리원, 목욕탕관리사 등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였다고 했지만, 일부에 불과한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박 시장은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수습대책에 따른 정규직화라고 항변했지만, 사고 이후 입사한 직원 933명 중 대다수가 기술 및 고객서비스 분야였고 조리원·이용사 등은 18명으로 2%가 채 안 됐다”며 “진정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직자 친인척으로 드러난 192명이 전부 채용비리나 고용세습이라는 결과가 나왔나”라고 반문한 뒤 “KT 부당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감 당시) 서울시까지 와서 국감을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었다. (한국당이) 다시 감사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박 시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사과 한마디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왜 지난번 원내대표 얘기를 하냐” “감사 결과에 따르라”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 방해하지 말고 사과나 하시라” “조용히 하라”라는 고성으로 맞받았다.

(10) 한국농어촌공사,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의혹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137억원 규모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났다”며 “여러가지 의혹 해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입찰에는 LG유플러스와,

KT, SK 등 3개사가 참여했으며 LG유플러스가 우선협상자로 된 후 최종 계약자가 됐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사업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는데도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농어촌공사는 문제를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주의 깊게 살폈다면 사업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특정 업체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사안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11) '사내 성희롱 사건' 모르쇠 답변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전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10월 18일 “기억못한 것을 보고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위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준비 못한 답변이었고 전혀 기억을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잘못드려 의정 활동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배숙 의원은 지난 15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및 14조 위반혐의로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과태료를 내고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이의신청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과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서장은 상부 보고를 누락하고 중간에서 '조율하자'며 무마에 나선 혐의다.

(12) 심평원의 허술한 채용관리

대안정치 장정숙 의원이 10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험생 1천135명에게 재시험을 보게 한 심평원의 허

술한 채용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사상 초유의 재시험 사태에도 외주 업체 핑계를 대고 있다”며 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심평원 직원은 필기 시험 답안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시험장에도 가지 않았으며, 외주 업체의 면접시험 촬영 제안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묵살하고, 자격미달 위탁채용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심사직 5급 일반’을 뽑는 필기시험을 진행하면서, 고사장 52개 중 9개에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OMR 답안지를 배포했다가 이후 공정성 시비가 일자 한 달 뒤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했다. 이어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게 한 일이 드러나 성희롱 물의도 빚었다. 장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5년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도, 비슷한 규모로 채용한 건강보험공단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짜는 등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3) 서울시 국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스스로 공익감사를 청구해놓고 감사 결과에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친인척이 채용된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도 드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채용비리 (의혹) 대상자 190여명 중 (배우자 포함) 2촌 이내가 63%인 121명”이라며 “소위 ‘귀족노조’가 지배를 하며 자기들 권익을 위해 몽

쳐서 조직적 비리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한) 무기직의 일반직 전환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동일한 룰로 다를 일이 아니다“라며 “무기직은 이미 임용된 상태이며, 능력 실증을 거쳤다“고 서울시를 두둔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정확하게 핵심을 찌러주셔서 속이 시원하다“며 “일반직 전환은 이미 우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처음 임면하는 것처럼 (감사원이) 법 적용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동조했다.

(14) “아빠 찬스로 채용“ 전남대병원 국감서 채용 비리

10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제주권 국공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아들과 조카가 모두 채용됐다. 아들은 지난해 채용돼 올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직권을 남용하면 형사 처벌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경징계를 요구하고 끝냈다. 이러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합격자 10명 중 전남대병원 실습 경력이 없던 사람은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등 2명뿐이었다“며 “‘아빠 찬스’도 아니고, ‘삼촌 찬스’를 넘어 ‘남친 아빠 찬스’까지 간 것이라면 심각하다“며 추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아들과 조카를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취직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전문지식이 있어서 월등히 나은 사람이라면 모를까“라며 “병원장의 직무유기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원장이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후보고를 받았으면서 아무런 조치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장도 빨리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도 확실하게 조사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해당 관리자가 (담당 업무상) 마지막 결제에만 참여한 것으로 보고받고 경고 조치했다. 정규직 전환이나, 필기시험 문제에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사무국장은 채용된 아들 여자친구

와 관련해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내다가 헤어졌으며 합격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1~ 12월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병원 측은 일부 직원들이 채용 관리 업무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불법 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며 이 중 12명에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조카 서류·면접 심사위원이었으며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광주지검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5) 적십자사에서 공금 1억 빼돌리고 성희롱도

봉사나 구호 등 인도주의적 사업을 주도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0월 15일 적십자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2014년 17건, 2016년 48건, 지난해 34건 등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올해 1~8월 12건이다. 유형별로는 복무규정 위반(45건)과 품위 손상(41건)이 가장 많았다. 성비위(9건), 공금횡령(7건), 금품수수(3건)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파면된 사람은 6명, 해임은 24명이었다.

성희롱은 지난해 한 해에만 5건이 적발됐다. 3명이 해임됐고, 2명은 감봉됐다. 올해도 한 명이 성희롱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액수가 큰 공금횡령과 금품수수도 여럿 드러났다. 적십자 충북지사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봉사활동 지원금을 빼돌려 1억2200만원을 챙겼다. 거창적십자병원 직원 B씨는 3년 7개월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수익금 75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상주적십자병원 C씨는 대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1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3. 혈세 낭비 내지 방만경영 의혹

(1) '17조 부채' 석유공사 해외근무직원 호화 사택 임차료만 '월 623만원'

부채만 17조원이 넘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매달 최대 623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과도한 임차료 지급 실태가 드러났다. 해외근무 직원의 절반 가까이는 임차료 지원수준이 공무원 기준을 초과했다.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은 현재 9개국 89명이다. 이들의 연간 임차료 지원액은 37억원(월 3억1000만원)이다. 최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월 임차료 상위 20명의 근무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호치민 5명, 싱가포르 1명, 카자흐스탄 알마티 1명, 캐나다 캘거리 1명이다. 월 임차료 최대 금액은 UAE 아부다비가 6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615만원, 카자흐스탄(알마티) 443만원, 베트남(호치민)과 캐나다(캘거리) 402만원 순이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들은 수영장이 딸린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사택(최대 82평)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산업은행 금융사고 금액 '1300' 억...은행 중 최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IBK기업·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씨티·SC제일은행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가 141건, 사고금액은 31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일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금융사고는 업무상 배임이나 사기, 횡령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것을 이른다. 금융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57억원 규모로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9억원)보다 46.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지난 5년간 사고금액이 가장 크게 발생한 곳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총 129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1%를 차지했다. 금융사고 방지에 앞장서야 할 국책은행이 오히려 금융사고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3) 관광공사, 해외주재원 학비지원에 국민혈세 '핑핑'

한국관광공사는 한 해외주재원에게 자녀교육비로 해마다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민혈세를 핑핑 쓰고 있어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베이징지사에 근무하던 A씨의 경우를 보자. 이 주재원은 자녀를 조기유학대상지로 소문난 이 학교에 보냈다. 이 주재원은 최근 1년 학비로 순수하게 자비로는 천5백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3천5백여만 원은 관광공사에서 지원받았다. 그는 베이징지사에 근무한 3년 동안 자녀 학비로 모두 모두 1억 3천만 원을 썼는데 이중 3천8백만 원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원에 가까운 9천5백만 원은 회사 학비지원금으로 충당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받아 10월 2일 공개한 자료에서 관광공사의 이같은 방만경영이 드러났다. 이 주재원이 이같이 과다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관광공사가 학비지원에 상한선을 두었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공사는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로 월 6백 달러를 기준으로 전액 지급과 일부 지급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 기준 초과액의 65%를 지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재원이 연간 연간 1억원에 가까운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을 몇대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내년 학기 분까지 8년여 동안 자녀교육비를 지원받은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123명 가운데 83%인 102명이 월 6백 달러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자녀교육비 지원금은 6천100여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3억 원가량에 이른다. 이 돈이 국회여행자 납부금으로 마련되는 관광진

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공사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혈세를 해외주재원의 자녀교육비 평평쓰고 있는 셈이다.

관광공사 측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국제학교의 학비가 비싼 특성이 있어 학비지원액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발령이 현지 학교의 모집 기간과 겹치지 않을 때는 이미 정원이 다 찬 학교에 가지 못해 부득이하게 학비 수준이 높은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4) 재외동포재단 347억 혈세 낭비

10월 18일 국회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의 초청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년 간 3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혈세 낭비’ 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석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에서 받은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에 따르면, 이 재단은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간 347억 원의 예산을 통해 12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41억3000만 원을 편성해 100명의 장학생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장학금 수혜자 10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보유한 연락가능자 수는 전체 장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597명에 불과했다. 이 중 223명만이 현재 거주 지역, 직업 등에 대해 응답했다. 장학생 5명 중 1명만이 응답한 셈이다. 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장학생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사실 사후관리가 엉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취임한 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전담직원을 뽑았다.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5) 생태원 764억짜리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혈세낭비”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생태원이 총 764억 원의 국비를 투입

해 설립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공단이 15년간 운영해 온 ‘종복원기술원’의 업무가 상당수 겹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5년 2월 양 기관의 업무혼선과 비효율성이 야기돼 역할과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모든 멸종위기종 복원 기능은 센터가 주관하고, 공단의 기술개발 기능을 센터로 이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능조정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업무 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원사업은 원종·확보·증식·방사 등 각 단위사업과 서식지 관리, 지역주민과의 협력 등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미 공단이 20여 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거금의 혈세를 들여 센터를 건립하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등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6) 北, 쌀지원 거절에도 쌀포대 170만장 제작…혈세 낭비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 17일 통일부가 8억원을 들여 제작한 쌀 포대 샘플을 펼쳐 보이며 “통일부가 북한이 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쌀포대를 제작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쌀포대 (포장지)를 보면 2019년으로 돼 있다. 올해 내 소비하기로 했는데 집행 안되면 쌀포대를 다시 만들 것이냐”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7월 북한에서 (쌀지원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쌀포대를) 제작해 140만개를 제작했다”며 “과정을 살펴보면 7월14일날 (쌀포대를) 발주하고 (북한이) 7월24일 거절했는데 8월24일까지 제작했다. 이는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식량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북한 쌀포대’를 사전에 제작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앞서 통일부가 쌀 지원을 위한 포대 140만장을 제작하는데 이미 8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7) 공영홈쇼핑, 매년 적자에도 신사옥 추진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계속되는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과 농수축산물 판로개척을 명분으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사업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을 놓고는 김기선(자유한국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정재(자유한국당), 이종배(자유한국당),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꼬집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5년 -190억원, 2016년 -94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2억원 등 4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누적 적자만 37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으로 86억원이 적자났다.

이에 따라 자본금 8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액수가 잠식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홈쇼핑은 '안정적인 방송 환경 구축'을 위해 신사옥을 건립하겠다고 지난 8월 말 공식 발표했다.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이후엔 경기 군포시와 업무협약도 체결, 사옥을 군포시로 이전할 경우 각종 지원도 받기로 약속했다.

김기선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사옥 건립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전 주주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와 신사옥 건립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신사업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서울 상암동의 현 건물(5500평)에 20년 임차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비용(입주 10년 후 임차료 5% 상승 가정)은 입주 당시 비용 75억원에 임차료 416억원을 더해 총 491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경쟁사인 홈앤쇼핑과 같은 1만5000평 규모로 신사옥을 건립할 경우엔 토지매입비 335억원, 건축비 970억원, 이전비 75억원 등 1000억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간다.

자본금 8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잠식당한 상황에서 주주사의 추가 출자나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소관부처인 중기부와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무리한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사육 신축보다는 경영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신사옥 건립이 방송 사고를 막고 안정적인 방송을 내보내는데 필수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은 올해 들어 지난 4월17일 54분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났었고, 같은 달 21일에도 3초간 방송이 멈췄었다.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7200억대 '청년 창업자금' 휴·폐업 22%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중진공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9963개 업체에 걸쳐 총 720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이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원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업체 9963곳 가운데 22%인 2150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1곳이 휴·폐업한 셈이다. 또 약정해지를 해 사고가 난 금액도 797억원에 달한다. 2018년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자금 부실률은 6.19%로 전체 정책자금 부실률(3.78%)을 뛰어넘었다.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진공 지원 청년몰 10곳 중 3곳 부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진공이 573억원을 들여 지원한 전통시장 청년몰 가운데 28.6%가 휴·폐업을 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공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조성된 26개 청년몰의 489개 점포 가운데 140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당시 51.5%였던 음식업이 이듬해엔 69.3%로 늘어나는 등 업종의 과밀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10) 국토정보공사(LX), 토지정보 앱 오류투성

LX(국토정보공사)가 수익원을 들여 만든 토지 정보 앱이 오류 투성이어서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LX 최창학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운전기사에게 관용차 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지난 5월 1일 출시한 LX의 토지 정보서비스 앱인 ‘랜디랑’이 출시할 때부터 토지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랜디랑’은 국토정보 외에 실시간 재난정보, 대피소 찾기, LX 맛집, 은행, 정류장 등 22개 종류의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랜디랑의 앱 구축비용은(舊 토지알림e 구축 포함) 총 4억9천여만원으로 최근 랜디랑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1억 8천여만원을 앱 개선 비용으로 썼다. 그럼에도 해당 앱이 쓸모가 없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필지당 공유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산 2-5)의 경우, 공유인수가 1월에는 2명, 10월 11일 기준 ‘751’명이었지만 앱에서는 ‘0명’으로 나타났다. 땅 하나에 소유자가 4831명으로 나타나 문제된 성남시 금토동 산 73의 소유주도 ‘랜디랑’ 앱에서는 ‘0명’으로,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문제된 서귀포 안덕면 토지의 소유주도 실제로는 ‘445명’이었지만 앱에서는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LX가 지적 측량 잘못으로 배상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배상금도 6년간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학 LX 사장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이른 새벽부터 운전기사에게 관용차 운행을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지적도 받고 있다.

(12) 예보, 국민혈세로 ‘합동공매’ 고집하더니...2천억 ‘손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저축은행 소유 재산 합동공매’가 예보의 잦은 유찰로 인해 5년 간 수

천 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해당 사태의 수습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이 ‘국민의 혈세’ 라는 점이다.

즉, 예보가 합동공매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을 묵인하고 합동공매를 고집하다 회수총액 및 회수율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합동공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한 저축은행 소유 재산 합동공매가 평균 16회에 달하는 잦은 유찰로 4년 6개월간 약 208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3) 산업인력공단, 6년간 한번도 안쓰인 국가직무능력표준 35개.

..42억 혈세 낭비

정부가 직업교육·훈련과 산업현장 간 괴리를 없애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 35개는 최장 6년 동안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들어간 개발 비용이 42억원에 달한다.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897개의 NCS 중 자가용항공기조종 등 35개의 NCS 항목은 2014~2016년 개발 이후 현재까지 교육, 훈련, 자격, 채용 분야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35개 NCS의 초기 개발 비용이 16억3000만원이었고, 이를 활용한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데 추가로 26억원이 들어갔다. 총 42억3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또한 이들 NCS 개선작업을 위해서만 최근 3년 간 153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303개 공공기관이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들 공공기관에서 NCS 활용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공공기관의 전체 신입 채용 1079건 중 632건(58.6%)만 NCS를 활용했고, 나머지 447건(41.4%)은 활용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은 NC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4년간 497억원을 들여 3934개의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몇 개의 기업이 NCS를 활용하고 있는지조차 파

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진국 의원은 지적했다.

(14) 해경, 지휘관 ‘공짜’ 호화 관사에 수억 원 혈세 낭비

지휘관급 해양경찰 간부(총경급)들이 지방 관사를 사용하면서 수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혈세로 사들여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희(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휘관급 해경 간부에게 제공된 관사 30곳의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료, 난방비 등 공공요금 2억4099만 원이 혈세로 지원됐다. 또 이들이 사용한 관사에는 에어컨(422만 원)·냉장고(400만 원)·텔레비전(249만 원)·세탁기(245만 원) 등 고가의 가전제품과 침대(230만 원)·소파(184만 원) 등 가구 등이 제공됐다. 최근 5년간 이들 해경 간부들이 입주한 관사에 새로 들어간 가구와 가전제품 등 집기류 구매에만 1억6690만 원의 예산이 쓰였다. 특히 관사를 사용한 인천해경서 모 총경의 경우 인천에 자택이 있으면서 관사에 거주하며 공공요금 등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공짜’ 호화 관사 생활을 한 해경 간부 30명 중 25명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자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와 임대료를 받아 챙긴 이도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해경청은 “해경 관사는 군·경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휘관에게는 관리비 상한제를 뒤 월 13만 원 내에서 공공요금이 추가 지원된다” 고 밝혔다.

(15) ‘혈세 낭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개장후 기항 크루즈 단 2척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수도권 최초로 건설한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점휴업 상태여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개장일인 지난 4월

26일 11만4천t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운항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날 같은 배가 중국 상하이(上海) 등지로 출항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기항이 예정된 크루즈도 이달 하순 2척, 다음 달 초순 1척을 합쳐 3척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국비 35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천186억원을 들여 이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건설했다. 터미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천t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길이 430m 부두와 지상 2층, 연면적 7천364㎡ 넓이의 청사를 갖췄다.

(16) 국과연, 최근 5년간 271억원 낭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연구기관들이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가 중도에 연구를 그만두면서 낭비된 세금이 최근 5년간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과연 소속 25개 연구기관에서 64건의 과제가 중단돼 271억원의 연구비가 아무런 소득없이 사라지고 이 가운데 회수 금액은 7억5000만원(2.7%)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1건(73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건(78억) 순이었다. 과제 중단 사유로는 주관기관 경영악화 중단, 평가결과 하위 10%, 평가 불량, 연구책임자 퇴사·이직, 연구비 목적 외 집행이나 부당집행, 참여기업의 부도 등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과제가 중단되어 아무런 소득없이 연구비를 낭비하더라도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3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 5년간 3건밖에 없었다.

(17) 행안위의 무인민원발급기 담합으로 4천억 '혈세낭비' 의혹

전국 지자체에 보급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중심으로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4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10월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해당 기업

이윤이 1000만원으로 약 4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6개 업체의 제품 중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 2019년 8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416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타피와 에니텍시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은 에니텍시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 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해 본 결과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만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해도 1000만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18)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멀쩡한 사무실 놔두고 사옥이전

2018년 7월 설립 후 올해 첫 국감을 받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방만경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선주들과의 접근성이 편리한 공사 소유의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무실을 1년 간 공실로 놔두고 공과금 1억8471만원을 납부하면서까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현재 사옥으로 이 전했다. 공사는 현재 이전한 건물의 5층과 7층을 사용하고 있다. 5층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68만원, 7층은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세 3627만원으로, 공사 소유의 사무실을 놔두고 1년 간 6억30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출한 셈이다. 사옥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만 9억4390만원을 지출했다.

(19) 헌법재판연구원, 35명이 강남 한복판 빌딩 4개 층 사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헌법재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무 인원 35명에 불과한 헌법재판연구원이 선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강남 한복판 빌딩의 4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원은 연간 운영예산 27억 원 중 절반 이상인 14억 원을 건물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해외출장 항공료만 25억원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에 따르면, 진흥원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5년간 1천396건의 해외 출장을 나가 총 41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항공료는 25억원이었다. 진흥원의 '여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 임원은 비즈니스석(2등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임원 대부분은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5년간 들어간 항공료는 3억5천만원에 달했다.

4. 분노 유발 국감장

(1) 엄중한 감사위원의 질의에 '소설같은 이야기' 라고 답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월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해운사 특혜 의혹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답변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 장관은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SM그룹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해운회사 SM 그룹에 채용돼 있고, SM그룹이 해운산업 재건 정부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선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 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원검토 내역을 보더라도 조 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태순 한국해운연합 회장과 이용국 동천해운 대표이사, 서계우 두우해운 부대표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장관의 처남인 정광보 보나미시스템 상무이사와 이상조 두우해운 대표이사는 불출

석했다.

(2) 국민 보호요청에도 눈감은 멕시코 영사관 직원에 대한 증언

10월 2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멕시코에서 누명을 쓰고 3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현정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지난 2016년 1월 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마감을 돕기 위해 잠시 방문했다가 현지 검찰에 성 착취 피의자로 체포돼 산타마르타 구치소에서 1154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는 올해 3월 현지 재판부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양씨는 검찰에 체포된 직후 주멕시코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모 당시 검찰 영사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국감장에 나온 양씨는 당시 영사관의 미흡한 대처 등에 대한 증언을 마친 뒤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양씨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도 힘들었다”며 “죽을 때까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옥 같았던 1154일을 돌이켜야 하는 게 두려웠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또다시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전 영사가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며 “그에게는 사소한 일이고 영사직을 떠나면서 잊힌 일일 수도 있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은 지금도 지옥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 전 영사가 면회를 와서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라며 미소 짓던 얼굴과 수갑 찬 저를 두고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하며 웃던 장면을 잊지 못한다”며 “정말 마음 같아선 저와 제 가족이 겪었던 지금도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을 이 전 영사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손길을 너무도 기다렸다. 저를 이 지옥에서 구

출해주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일들을 낱알이 파헤쳐서 바로잡아달라. 더는 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전 영사(현 울산 지역 경찰서장)는 태풍 ‘미탁’ 관련 재난 대비와 치안 업무 등에 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3) 고성산불피해 생생한데, 규제때문에 수출만 한다는 배낭식이동기지국

10월 2일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는 커다란 와이파이 문양이 새겨진 사각 물체를 등에 멘 한 남성이 등장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준비한 배낭식 이동기지국이다.

송 의원은 “산불이 났거나 재난 현장에 가면 주변에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된다”며 “굉장히 저렴하고 가볍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산간벽지에도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다 개발이 됐는데 규제 문제로 해외로만 수출이 됐다”며 배낭식 이동기지국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정부와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4) 서울시, ‘공정’ 말하면서 광고비 편중 지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올해 1~5월 라디오 광고비 전액이 시 산하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광고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월까지 라디오 광고비 8천268만 원 전액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가 좌편향의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비를 집중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5월까지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라디오 광고가 집중됐지만, 6월까지 상반기 전체로는 다른 방송사에도 고무 라디오 광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5) 풍수지리 때문에 사무실 이전 아니라도 방만경영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광 HUG 사장의 풍수지리 사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사장이 서울역 인근에 있는 사장·임원 사무실이 임대차 기간 1년이 남았는데도 풍수지리적 이유로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겼다”며 “이로 인해 3억5000만원 이상의 임대료·관리비 손실이 났다”고 질타했다. 또 HUG에서 여의도에 국토부 장관실을 만들고, 이 사장의 부산 사택도 풍수지리를 이유로 이전했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HUG 측은 “정책사업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국회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원 사무실을 서울역에서 여의도로 이전했다”며 “서울 여의도 임원 사무공간을 기존의 사무공간 대비 약 1/3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6)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바이러스 전염원 오판 대응책 미비

10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하는데 (북한으로부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환경부 장관은 아예 부정적, 국무총리도 부정적이었고, 국방부 장관은 북한 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고 했다”며 “초기부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도 “민통선 안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그동안 국방부, 환경부, 농식품부 간 혼선이 있어 대

처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정부가 남북 관계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북한에서 이동해 왔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북한 원인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후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철책선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7) 탈북모자는 굶어죽었는데 평양시 발전계획에 8억원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17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우리 시장님은 민생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다. 금년에만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약 150억원을 투입했다”며 “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8억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가 바로 평양시 발전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금년 들어와서만 11차례 미사일 도발하고 방사포를 쏘고 있다. 미사일 연습하는 것은 서울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평양시 발전계획을 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서 아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유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지는 아나“라며 “옥탑방 체험이 소중했다고 강조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사는지 체험해 볼 생각은 없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통일되면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나. 사과해야 한다“며 “제가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다. 상식과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Ⅵ. 매일매일 깜짝 놀란 통계 및 자료 편린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흠피 국회의원 게시 감사자료중)

(10월 2일)

○ 가계부채 1,556조원, 약한 고리 위험 징후 확대

유승희 의원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채무 불이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0대 이상에서만 2017년말 13만 6,6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 3,800명에 이어 올 7월 14만 5,300명으로 나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유명무실 6년 간 36건 청구, `15년 제외하면 매년 한자리수 6년 간 2건 인용, 인용률 5에 불과

기획재정부 관할인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8월 1일부터 6년 간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6년 간 불과 36건 청구되었고, 그 중 21건 각하되고 전부 인용 2건, 일부인용은 4건에 불과했다. 또한 6년 간 58번 개최되었고 그 중 대면회의는 19건에 그쳤다. 연평균 3회 개최라는 수치도 나왔다 (윤후덕 의원 보도자료).

○ 2023년 국가 채무 1,061조 전망, 재정수입 대비 1.91배로 급증!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하고 국가재정수입 대비 1.9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열악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수입은 2022년에 547.8조원에서 529.2조원으로 낮게 전망하면서도 국가 채무는 897.8조원에서 970.6조원으로 오히려 100조원 가까이 더 늘리고 있지만 현행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따르면 46.4에 그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등록외국인 126만여명, 체류외국인 242만명 시대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자료 기준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93개 국적 125만6,7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3만 제천시 인구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다. “체류외국인 수도 2014년 180만 명 규모에서 금년 8월말기준 242만 명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방식의 취업과 불법취업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입국정책 당국은 물론 고용노동부 등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 2019.6말기준, 6개월이상 비어있는 LH 임대주택 공가 1만6,248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임대하는 주택 중 금년 6월말기준 6개월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전국적으로 1만6,248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92만 7,925호와 비교하면 비중은 2%가량에 불과하지만,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6개월이상 공가가 이만큼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5년간 1만 1820건, 피해금액 795억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체국 예금 가입자의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는 1만

1820건에 피해액은 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수는 2015년 2326건에서 2018년 2871건으로 23.4 증가했고, 피해금액은 135억 여원에서 224억 여원으로 65.4나 급증했다. 작년의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피해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 “피감기관으로 영전하는 감사원 고위직 퇴직자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전체 55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 19명이 피감기관 및 유관기관에, 36명은 일반기업체 등에 취업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감기관에 취업한 퇴직자는 단 1명뿐이었다. 그러다가 2016년 4명으로 늘어나더니, 2017년에는 4명, 2018년 6명, 그리고 2019년 8월말 현재까지는 4명 등 감사원 고위 퇴직자들이 꾸준히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9명 모두는 재취업한 기관 등에서 감사 관련 직무를 맡고 있다.

(10월 4일)

○ 개인정보 3억 3천건 부동산 규제에 위법 활용

이헌승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 2017년 구축되어 한국감정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국세청, 행안부 등 타 기관과도 연결되어 총 3억 3,014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문 은닉 밀수, 공항 환승구역 밀반송 등 작년 한해만 2조4천억 상당 금괴 48톤 밀수 적발”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2조6,990억원 상당의 금괴 56,458kg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 산자중기 기관 80%가 국정원 보안지침 반영 안해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 61개 중 48개 미반영 최근 5년간 13개 주요기관 외부메일 전송 1,140만건, 정보보안 위험 가능성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 61개(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포함) 중 48개(80%) 기관이 기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국정원의 지침을 미반영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부처 및 주요 10개 기관에 대한 자료전송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망PC에서 인터넷망PC로 전송된 자료가 총 232만 9,499건이었으며, 업무망PC에서 외장메모리(USB 등)으로 전송된 자료는 총 45만 9,035건이었다. 외부메일로 전송된 자료는 1,140만 2,623건이었으며, 한국전력이 226만 1,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 가상화폐거래소 국내은행 계좌 800개 돌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울, 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국내 은행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59개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가 올해 6월 800개에 다 달았다. 3년 반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지자체로부터 5년간 71건 행정처분 받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환경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1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과태료 1억 4600만원을 납부했고, 해당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 무연고사망자 급증, 2018년 2,500명 돌파

2018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2,549명으로, 2017년 무연고 사망자 2,008명에 비해 27.5%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37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 592건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거주한 건수는 '14년 115건, '15년 83건, '16년 245건, '17년 106건, '18년 43건 등 최근 5년간 총 592건이나 적발됐다. 이 중 96.3%인 570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2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디지털성범죄 위반 5년간 4만 7,572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4만 7,931건이 심의되었으며, 2015년 3,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 6,263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10월 7일)

○ 부채에 허덕이는 에너지공기업, 해외파견수당은 최대 102억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파견수당으로 최대 102억, 성과급으로 최대 173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발전·에너지 분야 16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가스공사의 해외파견수당 총액은 102억으로 1인당 연평균 18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총 68억, 한국전력기술은 총 58억, 한국남동발전과 한전 KPS는 각각 23억과 22억으로 뒤를 이었다.

○ 북송아 특산지만 13곳?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중복포함 403개소를 대상으로 약 160여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 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 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약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와 복숭아가 13건, 딸기가 12건, 포도가 11건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 ‘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 13곳이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았다.

○ **하나의원 진료수는 20%이상 증가했는데 간호사는 되레 줄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나원 내 하나의원 진료수는 2018년 18,765건으로 2015년 15,635건에 비해 약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ESS안전대책만 발표하고 이행여부는 손 놓고 있는 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SS 사업장 총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실제 이행했거나 아예 ESS를 철거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받은 사람 1,965명**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 15,51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 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965명으로 나타났다.

○ **코레일 1회용 교통카드, 찾지 않은 보증금 15억원**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에서 1회용 교통카드 이용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최근 5년간 15억 1천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회용 교통카드 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에서 발행된 1회용 교통카드는 모두 7천793만 2천매였으며, 이 중 303만 1천매가 회수되지 않았다.

(10월 8일)

○ **“훈민정음 상주본, 이미 3분의 1 이상 훼손돼”**

국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전체 33장 가운데 최소 11장 이상이 소실된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일부 분실된 상태임에도 소장자 배익기씨가 보상금으로 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명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 비위행위 141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가 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6건이 기소됐으며 8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5건, 뇌물수수 2건, 향응수수 3건, 공무·업무방해 5건, 음주운전 14건 등이다.

○ 최근 4년간 농협 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770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가 지난 2016년 2,973건, 피해금액 150억 원에서 2017년 4,557건, 피해금액 300억원 급등하더니 지난해에는 6,987건, 591억으로 또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역시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선 726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2017년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6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인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퇴직자에게 월평균 600만원 수당? 진화하는 공공기관의 '제식구 챙기기' 수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기업 평가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월 평균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10년 간 118억 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 직원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퇴직 직원 148명을 기술·사업성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로 활용해 118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월 평균 200만원 이상을 받아간 퇴직 직원도 21명에 이르렀다. 외부 전문가 수당을 받아간 직원들 중 2급 이상

간부 퇴직자가 97명으로 66%이며 3급에서 6급까지의 직원은 51명으로 36%였다.

○ **국내 외국인 에이즈환자 334%급증, 정부대책은 無**

김순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에이즈 신규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신규감염자의 경우 2010년 773명에서 2014년 1,081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부터 989명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의 신규감염자는 2010년 64명에서 2018년에는 217명으로 334%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한, 국내 감염자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올라 현재 18%까지 치솟았다.

(김순례 의원보도자료)

○ **박완수 의원 “올해만 화재 출동 73%가 헛걸음, 오인신고 약7만8천건!**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8월 기준 전국 화재 출동 10만5천995건 가운데 화재 오인신고는 7만7천579건으로 전체 화재 출동의 70% 달한다. 화재 오인신고는 2014년 6만1천297건, 2015년 6만1천604건, 2016년 7만2천51건, 2017년 9만1천722건, 2018년 10만7천731건등 최근 5년간 모두 39만4천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평균 약 1만1천건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8월 현재 오인 건수는 7만7천579건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자체 R&D로 한해 1조2천억원 쓰는 17개 에너지공기업, R&D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연간 약 1조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체 R&D사업을 하는 국내 17개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국가R&D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공기업들의 R&D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연간 약 7,500억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R&D의 경우, ‘연구개발

자료 위조·변조·표절’, ‘거짓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특허의 연구자 개인명의 취득’, ‘사업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R&D 부정행위 적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참여제한(18개 항목), 자금환수(15개 항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R&D에만 적용되고 공기업 자체의 별도 R&D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병X, 엿을 드린다 ” 막말... TBS 제재 14건 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조국 법무 장관 딸을 출연시켜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실제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부터 현재까지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특정 상품 홍보 등으로 방심 위로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아왔다고 7일 밝혔다. 윤상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tbs 제재 의결 내용’에 따르면, tbs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방심위 제재를 받았는데 그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였다.

(10월 11일)

○ 관세청,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 검사...검사율 7.1%

관세청이 올해 들어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누출 사고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반입된 컨테이너 등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을 검사해 검사율이 7.1%에 달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반입된 해상화물 6만3599건 중 2295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율은 3.6%다.

○ '적자' 한전 등 발전6사, 2년새 직원 2500명 인건비 1200억 급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이 영업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직원수는 2500명, 인건비는 1200억원 급증해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공기업들은 2016년 이후 직원 2494명을 신규 채용하고 연봉 1억원이상 받는 직원이 7130명으로 늘었다. 발전 6개사 직원수는 2018년 기준 4만 6524명이다. 2016년(4만4030명)보다 2494명 증가했다. 연봉 1억원이상 직원은 2018년 7130명으로 2016년(7075명)보다 55명 증가했다.

○ 전라남도 내 성범죄자, 최근 5년간 2배 이 증가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제외하고도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강력 성범죄자만 전라남도 지역에 매년 2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전라남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라남도 내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90명 이었던 전라남도 내 성범죄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9년 8월 기준으로 5년 전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2,46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는 제외된 통계로, 이 중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강력 성범죄자만 해도 22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 권익위가 시정권고한 고충민원 100건 불수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고충민원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각 공공기관에 내린 770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 포함) 가운데 13.1%(100건)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인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국민들의 고충처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행정이 개

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 전국 원전 주변 드론 비행 사건 총 17건 중 부산만 10건

지난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테러사건 전례처럼 값싼 드론으로 국가 핵심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금년 일어난 원전 주변 드론 비행사건 17건 중 10건이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는 안티드론 관련 장비가 보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비행사건으로 조사한 건수는 ▲ 고리 · 신고리 원전 (부산기장, 울산 울주)에서 13건(금년 8월~9월 기준), ▲ 월성 원전 (경북 경주)에서 1건, ▲ 한빛 원전 (전남 영광)에서 3건으로 총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부산에서 확인되는 것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성원가만 3,000억원... 텅텅 빈 소재부품 전용공단!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소재부품 전용공단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절반가량이 텅텅 빈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재부품 전용공단(외투)으로 조성된 5개 산단의 총 지정면적은 120만㎡로 총 조성원가는 3,000억 원(지정면적×조성원가)이며, 임대율은 포항 83.5, 구미 71.0, 창원 56.8, 미음 54.8, 익산 39.1로 포항과 구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산단은 사실상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면적 120만㎡ 중 약 40, 47만㎡가 사실상 놓고 있는 것이다.

○ 매년 군 내 사망자 중 100여명 중 절반이상이 자살자

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자살사건이 33건, 지난해는 41건, 올해 8월말까지 29건 등 최근 3년간 육군에서만 103명이나 안타까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이주영 의원실 육군본부 보도자료)

○ **훈·포장 받지 못한 유공자 5,965명에 달해**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전체 독립유공자 1만 5,689명 가운데 훈장이 전수되지 않은 인원이 5,965명(3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장 1명, 대통령장 5명, 독립장 173명, 애국장 2,587명, 애족장 1,846명으로 건국훈장이 총 4,612명이며, 건국포장 386명, 대통령표창이 967명으로 나타났다.

(10월 14일)

○ **이산가족 10명 중 6명 사망... 고령화 대책 필요**

이산가족 신청자 10명 중 6명 꼴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1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산가족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측에 있는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산가족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말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3,353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54,126명이다. 특히 생존자의 연령대가 90세 이상 23.3%, 80세 이상 40.5%, 70세 이상 21.9%로 이산가족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석유공사, 17.5조 부채*, 2,287%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급여 3년째 인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17.5조로 그 비율이 2,287%에 달하며, 이러

한 심각한 부채 존재 상황에서, 직원 연봉 인상, 방대한 주택자금대여금 지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2019 경영공시 및 Alio’, ‘2018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조 원대 부채에서 2008년 5.5조 원, 2010년 12.3조 원, 2011년 20.8조 원 등으로 늘어나 2018년 현재 17.5조 원으로, 현재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87% 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 장석춘 의원, KC-1 수리에 200억원 투입했지만 또 결함 발생

우리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국책 연구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국산 화물창 기술 KC-1을 개발했다.

이후 2018년 삼성중공업이 KC-1을 도입하여 선박 2척(국적 26, 27호선)을 건조했고, 이를 SK해운이 인도받아 운항 하였으나 LNG화물창 외벽에 결빙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결함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가 KC-1에 문제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선사는 올해 말까지 약 1천억원의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장석춘 의원실 보도자료)

○ 충남경찰 “공기총 등 총기류 127정 분실, 행방 오리무중 경찰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최근 5년간 공기총 등에 따른 총기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충남지역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 등 총기류 127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 동안 142정의 분실 총기 중 15정은 회수되고 공기총 21정, 타정총 100정, 가스발사총 6정 등 127정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회수율은 10%에 불과했다.

○ 서울청·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 (2018년 기준)

시효소멸, 서울청, 2014년 38억 원 → 2018년 560억 원 14.7배 증가

시효소멸, 중부청, 2014년 15억 원 → 2018년 615억 원으로 41배 증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미징수 결손처리 총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멸시효를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세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15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치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같은 기간 총 10조3,310억 원, 중부청은 15조9,119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선동의원, 산은 정책자금 중복지원 1조원 달해

- IBK기업은행 정책자금 중복지원 991억원, 정책금융 몰아주기 개선해야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중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 중복지원금액만 9,781억원에 달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 불법사설경마 매년 증가 최근 4년간 11,213건 적발

최근 4년간 경마장 내부(경주실황 송출)와 외부(불법사설경마 운영자가 베팅하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마 현황은 다소 줄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활용한 불법 사설 경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경마장 내부와 외부현장에서의 단속인원은 지난 2016년 2,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처리 인원은 동일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658명이 단속되어 이중 약 70인 430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 태양광 사업, 2천여 개 업체 중 3곳이 45% 독식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친여 인사들 업체에게 혜택을 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10월 7일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를 소홀히 해 특정 협동조합(녹색드림, 햇빛발전, 헤드림협동조합)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 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 2,749건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사업 집행액 총 314억원 중 헤드림조합 53억원(16.9%), 햇빛조합이 50억 원(15.8%), 녹색조합 38억 원(12%)으로 총 141억 원이나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녹색조합의 허모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16대, 17대 총선에도 여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는 대표적 친여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햇빛조합 전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헤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진보 인사들이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일보 (<http://www.ikld.kr>)

○ 한국농수산물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0,088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 가운데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

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 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됐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부산국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율 30.8%…고액소송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건수 기준 패소율은 2015년 7.3%, 2016년 10.1%, 2017년 8.9%, 2018년 9.4%로 증가세다. 금액 기준 패소율은 2015년 7.6%, 2016년 9.2%, 2017년 10.0%였으나 2018년에는 30.8%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6%보다 높은 수준이다.

○ 해외 공동 R&D 사업 잦은 중단으로 3년간 나랏돈 161억 증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의 과제 중단으로 인해 정부 출연금 상당액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업화 실적도 저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중 공동편당형 사업의 중단 과제는 총 14건으로, 여기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161억원에 달했다.

○ 코트라 스타트업 외자유치사업, 신청기업 246개 중 실제 투자 유치는 연간 4건에 불과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의 IKMP(Invest Korea Market Place)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7년부터 IKMP 사업을 운영하며 총 246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투자유치 실적은 전체의 4.9%인 12건에 불과했다.

‘IKMP’ 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정보를 발굴하고 해외 유망 투자자에게 공개해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금 공급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일명 ‘데스밸리’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광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18일 국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통해 (주)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도적적 해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의원에 조사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멕시코 블레오 MMB법인(이하 MMB)에 투자를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파견직원에게 공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3배 높은 임금은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연말에 다시 공사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했고, 공사는 회계상 용역수입으로 계상해 지급 것 운영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법인의 파견직원들의 월급통장을 경유한 일종의 <급여깡>으로 공사는 멕시코 블레오 법인으로부터 지난 9년 동안 총 95억원을 송금받아 쌈짓돈으로 활용해 왔다. 여기에 중국 장가항 법인에서 95억(9,462,861,000, '08~'18),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123억(12,307,621,000, '07~'18)을 합산하면 급여깡의 액수는 313억원에 이른다.

○ **문케어 풍선효과. 비급여항목 증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가(15만원) 급여화(1.5만원) 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고, 2019년 2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부위별 초음파를 급여화 할 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공항공사, 법률자문 1건에 최대 1천만원 지급,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 소송 및 자문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6월까지 공사가 참여한 법률소송은 총 118건, 의뢰한 법률자문은 255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사가 이 같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법무법인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률소송 118건 중 □법무법인이 24건(20%),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이 각각 17건(14%), ⊕법무법인이 14건(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의 경우, 편중현상이 더 심하여 총 255건 중 ■법무법인이 78건(31%), ⊕법무법인이 62건(24%), 대형로펌인 ○○이 36건(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지난 5년간 법률소송으로 사용한 비용은 8억 3천만원 가량이며, 법률자문으로 사용한 비용은 6억 3천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 성범죄로 인해 징계 받은 교사 558명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 받은 교사 558명, 서울이 124명으로 최다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사의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8월

기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모두 5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4명으로 성범죄 징계 교원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71명, 전남 56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과 제주의 경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5천만 국민 중 5천명도 해당 안 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5) 열린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안 된다” 며 “왜 국민이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화같이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수사, 그리고 매일 불러들여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관행이나 문화를 고치는 그런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 고 말했다.

○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 최근 5년간 316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1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과된 임대료는 924억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316억3,600만 원이 체납됐다.

○ '인천공항 테러' 협박 급증...올 들어만 이미 12건

인천공항에 대한 테러 협박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접수된 테러협박 건수는 지난해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 김포와 제주

공항 등 다른 공항도 지난해 7건, 올해 9월까지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 20년간 347억 들인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사후관리 부실

20년간 34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장학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18일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347억 원의 예산으로 1,2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2019년에는 4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100명의 장학생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KBS, 사이버공격 시도 한해에만 백만건 육박

전 세계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KBS가 세계 각국에서 상당한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공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한해에만 933,938건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372건으로 가장 많은 시도가 있었고 ▲미국(5,811건), ▲이집트(3,185건), ▲러시아(1,644건), ▲베트남(1,3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내에서도 사이버공격이 966건을 기록했는데 전체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이버공격 시도가 있었다.

○ 중국김치 위생 부적합 87곳 중 25곳

국내로 김치를 수출하는 중국산 김치 제조업소 87곳 중 25곳이 비위생적인 부적합 업소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김치 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 제조업소 87곳 중 모두 25곳이 적발돼 19개 업체가 ‘개선필요처분을 받았고, 6개 업체는

심각한 상태로 판단돼 ‘수입금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태 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제조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고, 심지어 쥐의 흔적인 쥐똥이나 쥐굴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김치를 다 만든 완제품 역시 유통기한이 지났고, 보관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파악됐다.

○ **줄줄 새는 복지사업 재정, 부정수급만 948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업 유형별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총 12만3,897건, 부정지급 금액(환수결정액은)은 총 947억5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1만 775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2017년 3만 454건, 2018년 3만 30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지급 금액 역시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 혈세낭비·비효율
- 국정감사법대로 30일 국감을 시행하고, 전반10일에 현장시찰과 증인신문을 하자.

○ **제20대 국회 4차년도 국리민복상 평가 등**

이번 2019년도 국정감사 평가는 2019년도 종합 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할 예정임

《참고 : 자료 20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국회	대통령	연도	국회의원 정수 (감사위원)	상임 위 갯수	총 감사 일수	대상 기관 (실시)	현장 시찰 횟수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김대중	1999	299 (298)	16	183	352	18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김대중	2000	273 (272)	16	188	357 (355)	23
	김대중	2001	273 (269)	16	187	402 (392)	31
대선	김대중	2002	273 (271)	17	159	365	17
	노무현	2003	273 (271)	17	170	399	24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노무현	2004	299 (298)	17	190	457 (356)	31
	노무현	2005	299 (295)	17	174	461	16
	노무현	2006	299 (296)	17	180	510	40
대선	노무현	2007	299 (298)	17	160	488	20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이명박	2008	299 (298)	16	168	478	32
	이명박	2009	299 (289)	16	168	478	25
	이명박	2010	299 (271)	16	166	514	26
	이명박	2011	299 (295)	16	157	563 (556)	30
제19대 국회 / 대선 (2012.05.30.~2016.05.29.)	이명박	2012	300 (299)	16	163	559	27
	박근혜	2013	300 (297)	16	169	628	24
	박근혜	2014	300	16	163	672	11
	박근혜	2015	300	16	161	708	21
제20대 국회 (2016.05.30.~2020.05.29.)	박근혜	2016	300	16	161	691	22
대선	문재인	2017	300	16	163	701	27
	문재인	2018	300 (297)	17	168	753	24
	문재인	2019	300 (296)	17	159	788	20 (계획)

* 원 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및 조사 통계자료집 및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수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였음(계획과 시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현장시찰은 국정감사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같은 날 반이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나, 오전 또는 오후에 시찰을 하고 국감 진행, 정보위 포함)

**2019년도 국정감사 간이평가 보도자료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에도 올려 놓았습니다.**